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 제 출 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연구대표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전북연구원장 직무대리 장 성 화

---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	6
3 연구 방법 및 절차 .....	8
제2장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	11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동향 .....	13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	24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33
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	35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체계 및 지원사업 .....	47
3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상의 주요 쟁점 .....	51
제4장 지역우수인재(F-2-R) 심층면접 조사 분석 .....	59
1 지역우수인재(F-2-R) · 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개요 .....	61
2 지역우수인재(F-2-R) 외국인의 전북지역 생활 · 정착 경험 .....	64
3 기업 인사 담당자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 .....	81
제5장 제도 개선 및 정책제언 .....	91
1 정착 · 정주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 .....	95
2 제도 운용 개선 및 중앙부처 대응 전략 .....	107
3 정책적 활용방안 및 후속과제 제언 .....	110
참고문헌 .....	111

# 표 목 차

[표 1-1] 전국 및 전북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2024년	4
[표 2-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의 방향 전환	13
[표 2-2]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비교	18
[표 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	19
[표 2-4]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	20
[표 2-5] 2025~26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	21
[표 2-6]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수 및 F-2-R 배정 인원 추이	22
[표 2-7]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주요 개편 내용	23
[표 2-8] 지역우수인재 배정 인원 및 체류 인원 추이	25
[표 2-9] 2024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 신규 발급 현황	26
[표 2-10] 2025~26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 추천 인원 및 추천율 현황	26
[표 2-11] 광역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 비자 발급 추이	27
[표 2-1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체류 현황	29
[표 2-1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 추이	31
[표 2-14] 광역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 동반가족 체류 추이	31
[표 3-1]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 유형 국적별 추천 인원	36
[표 3-2] 2025~26년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 유형 국적별 추천 현황	37
[표 3-3]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 비자 신규 발급 추이	39
[표 3-4]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41
[표 3-5]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 체류 추이	44
[표 3-6]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자 체류 현황	45
[표 3-7] 전북자치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유형 국적별 추천 현황	46
[표 3-8] 전북자치도 인구감소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자 업무	48
[표 3-9]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정착지원 방안	54
[표 4-1] 지역우수인재·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주요 내용	62
[표 4-2]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63
[표 4-3]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별 체류자격 이력	64
[표 5-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93
[표 5-2] 전북자치도 2025~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95

# 그림 목 차

[그림 1-1] 전국 및 전북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 지정 현황 .....	3
[그림 2-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념도 .....	14
[그림 3-1]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	42
[그림 3-2] 전북자치도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우수인재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	42
[그림 3-3]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체계 .....	47
[그림 3-4]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외국인 일자리·채용 박람회 .....	49
[그림 3-5]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인지도 .....	56





# 제 1 장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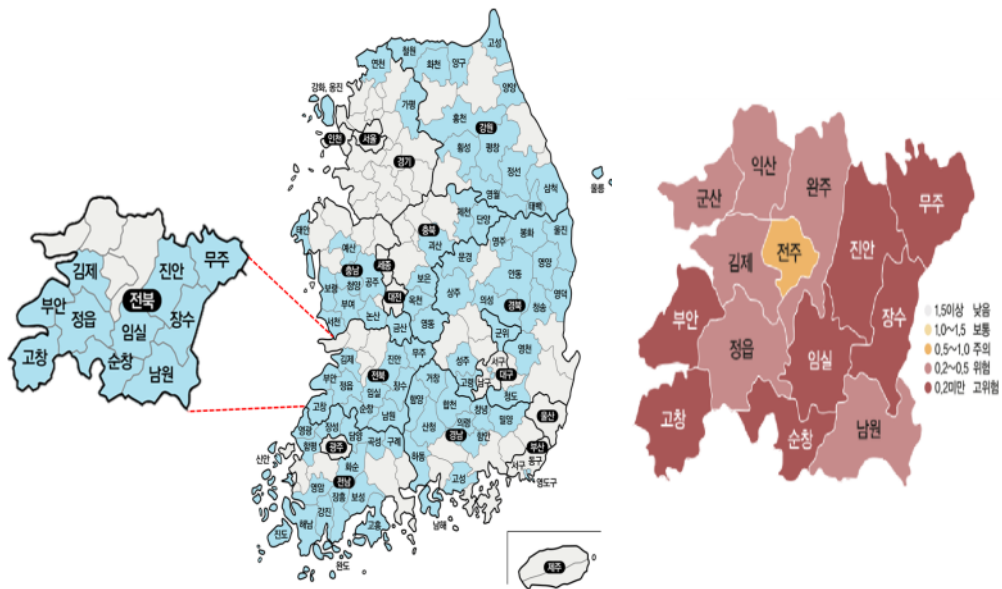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11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중 10개는 인구감소 지역)이며, 13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1.10월에 지정·고시한 전국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지역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는 익산시가 지정됨
- 호남지방통계청(2025)에 따르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위험지역(익산시·군산시·정읍시·완주군·김제시·남원시 등 6개 시군) 또는 지방소멸고위험지역(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7개 군)으로 지정됨



자료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호남지방통계청, 2025,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그림 1-1] 전국 및 전북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 지정 현황

- 이러한 지속적인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해 왔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인구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적고, 장기 체류·정주형(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대비 유입형(비전문취업·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유입형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장기 체류·정주하는 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구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외국인은 43,795명으로, 전국 등록외국인(1,488,353명)의 단 3.0%에 불과함. 이는 세종·강원·대전·광주·울산·제주·대구 다음으로 작은 규모임(전국 10위)
- 시군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외국인 인구의 55.7%가 전주시(10,521명)·군산시(9,414명)·완주군(4,458명) 등 비(非)인구감소(관심)지역 3곳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외국인 인구 장기 체류·정주 유도가 절실한 실정임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전문취업(E-9, 12,355명) 비율이 28.2%로 가장 높고, 유학(D-2, 6,785명) 15.5%, 결혼이민(F-6, 5,065명) 11.6%, 영주(F-5, 2,234명) 5.1% 순으로 이어져 유입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내 전체의 경우는 비전문취업(E-9, 328,114명) 22.0%, 영주(F-5, 202,738명) 13.6%, 유학(D-2, 178,107명) 12.0%, 결혼이민(F-6, 146,672명) 9.9% 순으로, 장기 체류·정주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1-1]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2024년

구분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488,353		43,795	
비전문취업(E-9)	328,114	22.0	12,355	28.2
방문취업(H-2)	91,818	6.2	584	1.3
전문인력(E1~E7)	85,955	5.8	2,033	4.6
유학(D-2)	178,107	12.0	6,785	15.5
거주(F-2)	61,039	4.1	1,238	2.8
영주(F-5)	202,738	13.6	2,234	5.1
결혼이민(F-6)	146,672	9.9	5,065	11.6
계절근로(E-8)	19,690	1.3	1,626	3.7
기타	374,220	25.1	11,875	27.1

주 : 재외동포(F-4)는 체류외국인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 법무부, 2025, 「2024 체류외국인통계」

- 그러나 최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추진 실적이 사업 초기와는 달리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인구 유입 및 정착·정주지원 정책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동반가족의 생활·정착 실태와 제도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주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가운데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에 관한 연구(이주연 외, 2024)는 수행되었으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유형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됨
- 아울러 시범사업 도입 이후 약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무 체류기간(5년) 이후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이 전북지역에 지속 체류·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유형 외국인의 유입-체류-정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목지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운용 현황 및 추이와 지역우수인재(F-2-R)의 생활·정착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정주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임
- (시간적 범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도입된 '22.10월부터 '25.9월까지임
- (정책대상 범위) 전북지역에 체류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으로, 대상 체류 자격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임. 이 중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유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나. 주요 연구 내용

####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비자 유형과 제도 변화 내용을 검토함
-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추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분석함

####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추천·발급·체류 현황 및 추이를 시군별로 비교·분석함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체계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검토함
- 도내 유관기관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도출함
  - 전담 기관 부재, 시군 간 일자리·정착지원 편차, 정주 유도 요인 부족,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비자 요건 등

#### 3) 지역우수인재(F-2-R) 심층면접 조사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생활·정착 실태 및 정책적 수요 분석을 위해 지역우수인재(F-2-R)·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함

- 기본적 배경,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전북지역, 일자리, 동반가족, 정주 여건, 사회관계 등 총 7개 영역에 관해 심도 있게 조사·분석함

#### 4)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제시

-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의 정착·정주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제시함
- 제도 운용 개선 및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제시함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가.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및 행정·통계 자료 분석

- 중앙부처(법무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관련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자료집 등을 검토함
  - 법무부 및 타 지자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관련 정책 동향, 제도적 기반(조례), 우수지역 사례 등을 검토함
- 법무부 및 각 지자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각 지자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공고문,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부자료 등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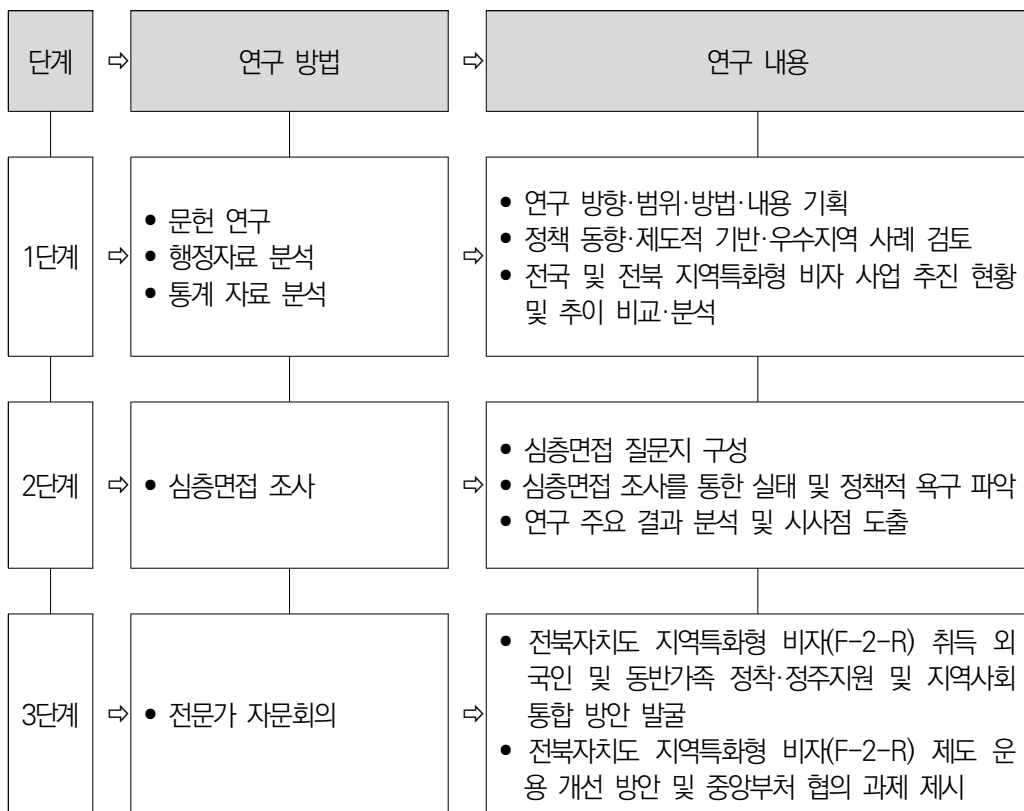
##### 2) 심층면접 조사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생활·정착 경험과 비자 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주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함
- (조사 대상자)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 5인, 기업의 인사 담당자 2인, 유관기관 담당자 6인 등 총 13인을 대상으로 함
  -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 및 기업의 인사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는 제4장에,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는 제3장 제3절에 각각 제시함
- (면접 방법)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2인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으로 시행함. 인터뷰는 1회당 약 1~2시간이 소요됨
- (면접 내용) 기본적 배경,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전북지역, 일자리, 동반가족, 정주여건, 사회관계 등을 중심으로 비자 제도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 전북지역 일자리·정착 경험 및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 기본적 배경 : 국적, 성별, 체류자격 이력, 혼인·가족 형태 등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 주관적 인식, 전환·갱신 경험, 주요 요건 및 개편 관련 의견 등
  - 전북지역 : 이주 동기, 지속 체류·정주 의향/이유 등
  - 일자리 : 구직·채용·고용 경험, 근로 조건·근무 환경 등
  - 동반가족 : 초청 의향·여부, 가족단위 체류·정착 어려움 등
  - 정주 여건 : 주거 관련 어려움, 일상생활 관련 애로사항 등
  - 사회관계 : 갈등·차별 경험, 커뮤니티 이용 경험 등

### 3) 전문가 자문회의

- 심층면접 조사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의견을 수렴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및 정주지원 방안을 도출함

#### 나. 연구 추진 절차







## 제 2장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동향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 II.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동향

#### 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도입 배경

#####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도입 필요성 및 의의

-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경제 활력 저하,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민·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함
- 또한,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방향이 기존의 중앙 주도의 노동력 충원에 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인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부처(법무부·행안부)-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기반 비자정책 수립이 촉구됨

[표 2-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의 방향 전환


	제1차~제3차(2008~2022)	제4차(2023~2027)
유입관점	노동력 충원	우리 사회 구성원, 전문·숙련인력 등 다변화
정책방식	적극적 정주 유도 미흡	사회통합, 정착·정주 유도
추진체계	단편적·분절적 중앙중심	종합적·체계적 중앙-지방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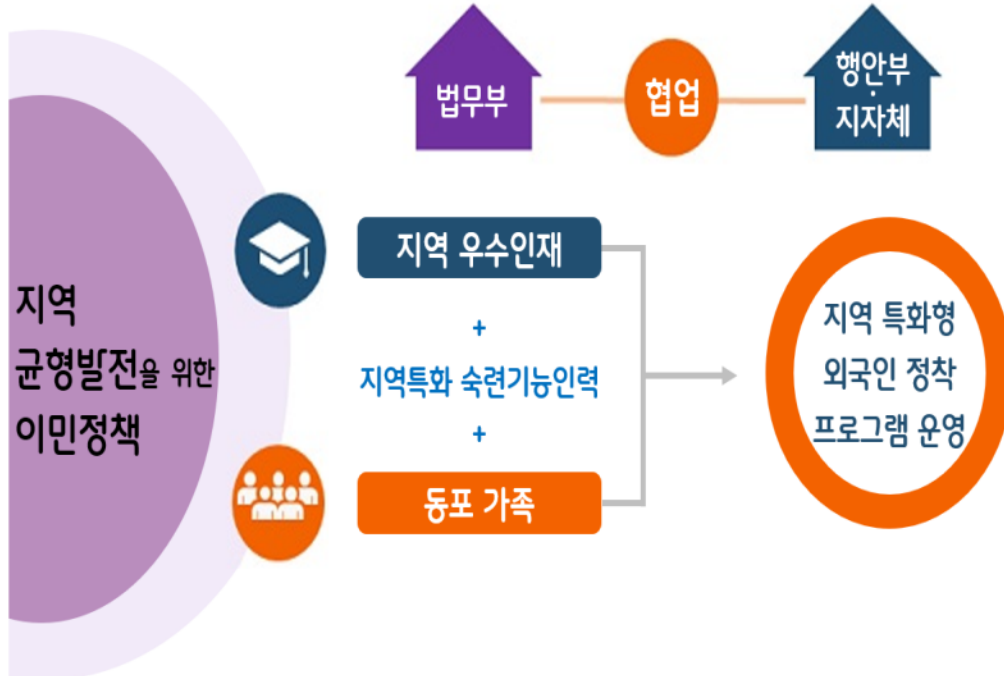
-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선정함
- 이후 수도권 인구 편중·지역 활력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이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소득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취약 외국인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우수인재, F-2-R)·지역특

화 숙련기능인력(E-7-4R)·지역특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F-4-R) 등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설계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이를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대학 현황, 지역특화 산업 및 일자리 구조 등에 적합한 외국인을 선별하고, 정착을 유도·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생산가능인구 유입, 인구 유출 억제 등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목표할 수 있게 됨
- 영주(F-5) 이전 단계의 거주 비자 발급은 외국인에게는 체류·정착 안정성 제고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거주 확약 기간 동안 인구·경제적 활력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효과가 창출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법무부) 사업지자체 인원 배정, 우수인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동포가족의 지역정착 체류특례 부여  
(지자체) 지역별 필요인재 규모파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 2025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자료

[그림 2-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념도

##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제도적 기반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에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24. 거주(F-2)’ “파”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 및 특혜

-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에게는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허용·배우자 취업 허용 등의 특혜가 공통적으로 제공됨.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거주지·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착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
  -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F-3-1R, F-3-2R, F-3-3R)의 경우, 배우자는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령기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에 재학해야 함. 이를 통해 동반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정착이 보다 수월해짐
  - 단, 동반가족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 독립된 주거시설에서 체류해야 함

### 1) 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우수인재, F-2-R)

-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전문취업자 등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는 유형임
- 주요 자격요건에는 일정 수준의 학력/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제한된 거주지역·기간, 취·창업 여부 등이 포함됨
  - (학력/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또는 광역자치단체 연간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자, (거주지역·기간) 사업대상 기초자치단체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할 자 - 단,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되며, 거주 또는 취·창업 중 하나만 희망한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취·창업)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된 자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함,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이 없는 자
- 우수인재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국적 비율이 지자체 쿼터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등으로 인해 추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특화 우수인재의 배우자(F-3-1R)는 최초 자격 획득 시부터 2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를 충족해야 함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6개월로 제한됨

## 2) 지역특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F-4-R)

- 인구감소지역에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거나 가족과 동반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지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유형임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 선정 이전부터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재외동포, (국내·외 전입자) 국내 비(非)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동포 개인이 선(先)이주 후 1년 이내에 가족이 순차적으로 이주하는 방식이 허용됨
  - 기존 재외동포(F-4)도 외국국적동포(F-4-R) 비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
- 지역우수인재(F-2-R)와 달리, 타 지역으로의 이주 제한을 제외하면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며,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비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요건이 충족되는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천 반려가 금지됨
- 게다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는 재외동포(F-4)와 달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건설단순종사원·이삿짐 운반원·택배원·건물청소원·골프장캐디 등 단순노무 업종(43개 직업)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긴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임
- 또한, 해당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F-5-6R) 전환 시 소득요건을 GNI 이상에서 GNI 70% 이상으로 완화하여 줌

- 기존 거주자는 2년 이상, 국내·외 전입자는 4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평가 성적을 취득해야 함

### 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하는 유형임
  - 단, 인구감소지역 특례에 의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할 경우 해당 체류자격 또는 직전 체류 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됨
- 기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K-point E-7-4) 체계를 적용함. 배정 인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쿼터 범위 내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모든 지역에 거주·취업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과 달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가점이 50점으로 숙련기능인력(30점)보다 높고,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숙련기능인력은 수도권 4년·비수도권 3년)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측면도 존재함
- 주요 자격요건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근로계약 및 한국어능력, 제한된 거주지역·기간, 점수제 충족 등이 포함됨
  - (소득·근로계약)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고,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2급 이상, (거주지역·기간) 사업대상 기초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할 자 - 단,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됨, (취업)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이 예정된 자, (점수제) 총점 300점 중 200점 이상인 자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을 변경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표 2-2]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비교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 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부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자료: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저자 일부 재작성

## 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변화

### 1)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22년 10월에 도입되어 '22.10.4.~'23.10.3.에 1년간 시행되었으며, 지역우수인재(F-2-R)와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이 운영됨
  - 단, 시범사업이 1차와 2차 공모로 진행되어 2차 지역은 2023.1.1.부터 2023.10.3.까지 시행됨
- 행안부가 선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총 28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됨
  - 1차 공모로 전남·경북 각 4곳, 전북 3곳, 충남 2곳, 경기·경남 각 1곳 등 15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2차 공모로 부산·전북 각 3곳, 충북·전남 각 2곳, 대구·경기·경북 각 1곳 등 1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됨. 결과적으로, 전북·전남(각 6곳), 경북(5곳), 부산(3곳) 순으로 시범사업 대상지가 많이 지정됨
  - 지역우수인재(F-2-R) 및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을 모두 운영하는 다른 25개 지역과 달리, 충남 보령시는 지역우수인재(F-2-R) 유형만, 전남 장흥군·강진군은 외국국적동포(F-4-R) 유형만 운영함
- 이에 따라 지역별로 20~400명 이상의 신규 외국인을 유치하거나 기존 거주 외국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은 쿼터 제한이 없는 반면,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지역별로 한정된 인원을 배정받음. 배정 인원은 전북(400명), 경북(290명), 전남(200명), 충북(170명), 충남(150명), 부산(110명), 경기·경남(각 80명), 대구(20명) 순으로 많았음

[표 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

광역 자치단체	지역 수	배정 인원	1차 지정 지역(15곳)	2차 지정 지역(13곳)
부산	3	110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1	20		남구
경기	2	80	연천군	가평군
충북	2	170		제천시·단양군
충남	2	150	보령시(지역우수인재)·예산군	
<b>전북</b>	<b>6</b>	<b>400</b>	정읍시·남원시·김제시	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남	6	200	장흥군(외국국적동포)·강진군(외국국적동포)·해남군·영암군	고흥군·보성군
경북	5	290	영주시·의성군·영천시·고령군	성주군
경남	1	80	고성군	

자료 :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결과

## 2)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종료 직후인 2024년에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됨
- 공모 결과, 경북 15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전남 각 6곳, 부산 3곳, 대구·경기·강원 각 2곳 등 66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됨
- 지역우수인재(F-2-R) 쿼터는 지역별로 70명부터 최대 703명까지 배정받았는데, 전북(703명)·경북(700명)·충남(488명)·전남(425명) 순으로 그 규모가 컸음

[표 2-4]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

광역 자치단체	지역 수	배정 인원	지정 지역(66곳)
부산	3	120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2	70	남구·서구
경기	2	120	가평군·연천군
강원	2	210	횡성군·고성군
충북	6	205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	9	488	공주시·보령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
<b>전북</b>	<b>10</b>	<b>703</b>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	6	425	곡성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해남군·영암군
<b>경북</b>	<b>15</b>	<b>700</b>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11	250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자료 : 법무부, 2024,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공모 선정 결과

## 3) 2025~26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년 단위('25.2.20.~'26.12.31.) 다년도로 추진되며, 기존 지역우수인재(F-2-R)·외국국적동포(F-4-R) 유형에 더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도 운영됨
- '25.2월 기준, 경북 15곳, 경남 11곳, 전북·전남 각 10곳, 충남 9곳, 충북·전남·강원 각 6곳, 부산 3곳, 대구·경기 각 2곳 등 7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됨

-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은 경남(1,191명), 충남(798명), 전북(796명), 경북(781명) 순으로 많음
- '25.2월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지역과 배정 인원이 확대됨

[표 2-5] 2025~26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및 F-2-R 배정 인원('25.2월 기준)

광역 자치단체	지역 수	배정 인원	지정 지역(74곳)
부산	3	300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2	150	남구·서구
경기	2	130	가평군·연천군
강원	6	229	횡성군·고성군·삼척시·양양군·영월군·홍천군
충북	6	311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	9	798	공주시·보령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
전북	10	796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	10	386	곡성군·고흥군·장흥군·해남군·영암군·강진군·영광군·장성군·진도군·화순군
경북	15	781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11	1,191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자료 : 2025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자료

#### 4)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주요 변화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가시적으로 확대되어 음. 대상 지역은 15곳에서 현재 74곳 이상이 되었고,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도 '23년 1,500명에서 '25.2월 기준 5,072명으로 크게 증가함
- 2024년도 사업의 경우, 부산·대구·경기·충북이 시범사업과 유사한 규모를 배정받은 것과 달리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배정 인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함. 또한, 강원 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함
  - 특히 경북의 지역우수인재(F-2-R) 쿼터가 무려 410명(290명→700명)이나 늘었으며, 충남·전북·전남·강원도 각각 200~300명 이상 증가함

- 2025~26년도 사업('25.2월 기준)의 경우,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의 시행 지역 수가 전년도와 동일한 가운데 전남과 강원 지역이 4곳씩 추가됨. 경남의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이 비약적으로 확대(250명→1,191명)되고, 충남·부산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배정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배정 인원도 1,781명이 늘어남. 다만, 경기·강원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전남은 소폭 감소함
- 이처럼 사업에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북을 비롯한 충남·경북·경남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도입 이후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임
  - 다만, 사업 대상지의 확대는 지자체 간 외국인 확보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기도 함

[표 2-6]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수 및 F-2-R 배정 인원 추이

광역 자치 단체	2023		2024			2025~26('25.2월 기준)		
	지역 수	배정 인원	지역 수	배정 인원	배정 인원 변화량	지역 수	배정 인원	배정 인원 변화량
부산	3	110	3	120	+10	3	300	+180
대구	1	20	2	70	+50	2	150	+80
경기	2	80	2	120	+40	2	130	+10
강원	-	-	2	210	+210	6	229	+19
충북	2	170	6	205	+35	6	311	+106
충남	2	150	9	488	+338	9	798	+310
전북	6	400	10	703	+303	10	796	+93
전남	6	200	6	425	+225	10	386	-39
경북	5	290	15	700	+410	15	781	+81
경남	1	80	11	250	+170	11	1,191	+941
전체	15	1,500	66	3,291		74	5,072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 결과, 2025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자료, 저자 재구성

-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매년 개편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요 요건이 상당히 강화된 경향이 있음

- 무엇보다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대상자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비자 소지자가 제외되면서 유학 관련(D-2, D-10)과 전문취업(E-7) 비자 소지자로 한정됨
- 이에 따라 지역우수인재(F-2-R)로 직접 전환이 불가하게 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비자 소지자는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우선 취득한 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지역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게 됨
  -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지역우수인재(F-2-R)로의 전환이 복잡해진 점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특정 국적 비율 제한이 최초 지자체 쿼터의 50%였으나, '24년도에는 40%, '25년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국적 다양성이 강조되었으며, 한국어 능력은 기존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에서 최근 들어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 반면, 지정 업종으로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고 소득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으로 하향하는 등 또 다른 일부 요건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기도 함
  - 전북을 예로 들면, '25년 소득 기준이 연봉 약 3,508만 원(GNI 70%)에서 약 3,013만 원(생활임금)으로 낮아져 충족이 수월해짐

[표 2-7]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주요 개편 내용

방향	주요 내용	2023년 → 2024년	2024년 → 2025~26년
강화	F-2-R 대상자	<del>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del> 제외	좌동
	특정 국적 비율 제한	50% → 40%	40% → 30%
	한국어능력	변화 없음(3급/3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완화	취업 가능 업종	변화 없음 (법무부·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법무부·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 제한 없음
	소득 기준	변화 없음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 광역자치단체 연간 생활임금 이상
	외국인 고용인원	변화 없음(최대 20명)	최대 20명 → 최대 50명
신설	비자 유형	변화 없음(F-2-R/F-4-R)	F-2-R/F-4-R → F-2-R/F-4-R/E-7-4R

자료 : 저자 재구성

##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초기에는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의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외국국적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유형은 전반적으로 발급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유형은 전북과 경북이, 외국국적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유형은 경북·충북·충남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충남·경기·경남이 비교적 우세한 편임

### 가.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 1)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체 1,500명 쿼터의 92.5%에 해당하는 1,388명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취득함
  -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충북(98.8%)·전북(96.8%)·충남(96.7%)·경북(93.8%)·전남(93.5%)·경남(92.5%)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배정된 쿼터를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대구(40.0%)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하였음
  - 전북에 체류한 지역우수인재(F-2-R)가 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북(272명)·전남(187명)·충북(168명)·충남(145명) 순이었는데, 특히 전북 김제시(149명)·충북 제천시(135명)·경북 영천시(129명)·전남 영암군(107명)에 다수 유치됨
- '24.12월말 기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2,759명이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함
  - 지역별로는 전북에 체류한 지역우수인재(F-2-R)가 640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북(558명)·충남(371명)·충북(289명)·경남(275명) 순이었는데, 경북·전북·충남·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전년보다 200명 이상 늘어난 지역우수인재(F-2-R)가 체류함. 특히 전북 김제시에 체류한 지역우수인재(F-2-R) 인구(298명)가 두드러짐
- 그중에서 2024년 지역우수인재(F-2-R) 신규 취득자는 10월말 기준 1,535명으로, 경북(315명)·전북(299명)·충남(238명)·경남(223명) 등에서 많이 신청·발급함
- 하지만 이는 해당연도 쿼터(3,291명)의 46.6% 수준에 불과한데, 시범사업보다 강화된 요건 적용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충남, 전북, 경북을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의 달성률이 50% 미만이었으며, 전남(12.5%)과 강원(28.1%)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25.6월말 기준, 총 3,121명의 외국인이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임
  - 시범사업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북(690명)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그다음으로 경북(624명)·충남(472명)·충북(325명)·경남(307명)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세는 충남(101명)이 가장 컸음. 한편, 사업 대상지 중에는 전북 김제시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가 계속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5.1월부터 7월까지의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추천 인원은 435명으로, 2025~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각 년도 배정 인원이 전체 쿼터의 절반씩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쿼터(2,457명)의 17.7%를 달성한 것에 불과한 수준임
  - 구체적으로, 충남(121명)·전북(83명)·부산(57명) 순으로 추천 인원이 많으나, 부산(76.0%)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추천율이 매우 낮은 편임

[표 2-8]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 및 체류 인원 추이

광역 자치단체	대표 기초자치체	배정 인원			체류 인원*		
		2023	2024	2025~26	2023	2024**	2025**
부산		110	120	150	85	186	225
	서구				30	64	77
	동구				23	54	67
	영도구				21	52	66
대구	남구	20	70	150	8	63	69
					8	42	46
경기	연천군	80	120	130	62	97	110
					44	57	64
강원	횡성군	-	210	229	-	53	57
						39	40
충북	제천시	170	205	311	168	289	325
					135	185	208
충남	보령시	150	488	798	145	371	472
	예산군				73	127	150
					72	117	148
전북	김제시	400	703	796	387	640	690
					149	298	330
전남	영암군	200	425	378	187	227	242
					107	141	150
경북	영천시	290	700	781	272	558	624
					129	192	210
경남	고성군	80	250	1,191	74	275	307
					73	92	93
전체		1,500	3,291	4,914	1,388	2,759	3,121

\* 2023년과 2024년 체류 인원은 12월말 기준이고, 2025년 체류 인원은 6월말 기준임

\*\* 2024년 이후 체류 인원 현황은 기존에 해당 체류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II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II

[표 2-9] 2024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신규 발급 현황('24.10.31. 기준)

광역자치단체	배정 인원	신규 발급 인원	달성률(%)
부산	120	114	95.0
대구	70	60	85.7
경기	120	39	32.5
강원	210	59	28.1
충북	205	135	65.9
충남	488	238	48.8
전북	703	299	42.5
전남	425	53	12.5
경북	700	315	45.0
경남	250	223	89.2
전체	3,291	1,535	46.6

자료 : 박민정 외, 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표 2-10] 2025~26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추천 인원 및 추천율 현황('25.7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전체 배정 인원	1년 배정 인원 추정	추천 인원	추천율(%)
부산	150	75	57	76.0
대구	150	75	10	13.3
경기	130	65	4	6.2
강원	229	114~115	5	4.3
충북	311	155~156	51	32.7
충남	798	399	121	30.3
전북	796	398	83	20.9
전남	378	189	7	3.7
경북	781	390~391	46	11.8
경남	1,191	595~596	51	8.6
전체	4,914	2,457	435	17.7

자료 : 각 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 공고문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 2) 외국국적동포(F-4-R) 유형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0명이었음. 지역별로 보면 충남(19명)·전남(15명)·경북(13명)·전북(11명) 순으로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었음
- 이는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이 지역우수인재(F-2-R) 유형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외국국적동포(F-4-R) 자격 취득자는 '24.9월 기준으로 184명으로 증가하는 등 9개월간('23.12월~'24.9월) 전국적으로 114명만 해당 자격을 새롭게 취득함. 즉, 증가 추세가 다소 더디게 나타남
  - 지자체별로는 경북(34명)·충북(32명)·충남(24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새롭게 유치한 반면에, 부산·대구·경기·강원·전북·경남 등 6곳은 거의 또는 전혀 변동이 없었음

[표 2-11] 광역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F-4-R) 비자 발급 추이

광역자치단체	2023.12	2024.9	증가 인원
부산	7	8	1
대구	0	4	4
경기	1	2	1
강원	-	0	0
충북	4	36	32
충남	19	43	24
전북	11	14	3
전남	15	30	15
경북	13	47	34
경남	0	0	0
전체	70	184	114

자료 : 박민정 외, 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 이처럼 외국국적동포(F-4-R) 자격 취득자가 미미한 수준임에 따라, 영주(F-5-6R) 자격 취득자도 '25.6월 기준 6명으로 매우 적었는데, 이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단 1명이 늘어난 것임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3.12월말에 전남 영암군(3명), 경북 영천시·충남 예산군(각 1명) 등에 총 5명의 F-5-6R 영주권자가 체류함. '25.6월말 기준으로 보면, 영주(F-5-6R) 취득자(6명)는 전남 영암군에 3명, 경북 영천시·부산 동구·충남 천안시에 각 1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됨

### 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25.6월 기준, 전국적으로 419명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비자가 '25.2월에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취득자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충남(91명)·경기(72명)·경남(71명)·경북(54명)·전남(47명)·전북(45명)·충북(24명) 순으로 많이 체류하며, 이외에 부산(2명)·대구(3명)·울산(1명)에도 소수가 체류함
- 경기 포천시(63명)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취득자가 특히 밀집하여 있고, 충남 논산시·경북 영천시·경남 함안군(각 23명), 전남 영암군(19명), 충남 제천시(12명), 전북 정읍시(11명) 등에도 일부 체류 중임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이내에서 모집되는 특성이 있어 달성률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E-7-4R) 쿼터(3,001명)의 14.0% 정도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 중임
- 충남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취득자 비율이 약 21.7%로 높은 편이고, 경남(16.9%)·경기(17.2%)·경북(12.9%)·전남(11.2%)·전북(10.7%) 순으로 이어짐

[표 2-12]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 현황('25.6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대표 기초지자체	모집인원	체류 인원	비율(%)
부산	서구	159	2	0.0
			2	
대구	군위군	100	3	0.0
			2	
울산	울주군	97	1	0.0
			1	
경기	포천시	200	72	17.2
			63	
강원	횡성군	83	9	2.1
			4	
충북	제천시	274	24	5.7
			12	
충남	논산시	510	91	21.7
			23	
전북	정읍시	160	45	10.7
			11	
전남	영암군	308	47	11.2
			19	
경북	영천시	560	54	12.9
			23	
경남	함안군	550	71	16.9
			23	
전체		3,001	419	14.0

자료 : 법무부, 2025,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나.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동반가족 대다수는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자녀로, '25.6월 기준 1,878명이 지역우수인재(F-2-R)의 가족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함
- 특히 전북·경북·충북·전남·충남 등에 많이 체류하는데, 그중에서도 전북·경북이 두드러지는 편임
  - '25.6월 기준, 전북과 경북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 동반가족은 각각 474명과 395명으로, '24.12월 대비 1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임
  - 해당 지자체는 아니지만 대전(3명)과 광주(2명)에도 소수가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됨
- 지역우수인재(F-2-R) 취득자 동반가족은 배우자·미성년자녀(F-3-1R) 또는 국내출생자녀(F-1-R)로 구분되는데, 배우자·미성년자녀(F-3-1R)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출생자녀(F-1-R)는 감소하고 있음
  - 배우자·미성년자녀(F-3-1R)는 '24.12월 기준 1,153명에서 '25.6월 기준 1,671명으로 6개월 만에 518명이 증가함. 반면에 국내출생자녀(F-1-R)의 경우, '23.12월에 499명이었지만 '24.12월에는 252명, '25.6월에는 207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함
  - 국내출생자녀(F-1-R)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해 왔지만, 충남은 예외적으로 '23.12월 기준 18명에서 '25.6월 기준 31명으로 소폭 증가함
-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F-3-1R)는 전북·경북에서 눈에 띄게 증가함. 그러나 국내출생자녀(F-1-R)의 감소 폭 역시 전북·경북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국국적동포(F-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F-3-2R) 또는 국내출생자녀(F-1-9R)는 '25.6월 기준 179명이 체류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충북(55명)·경북(52명)·충남(49명) 등에 거주함
  - '24.12월 대비 '25.6월에 경북(20명), 충북·충남(각 17명), 전남(5명)의 외국국적동포 가족은 5~20명가량 증가하였지만, 부산·대구·경기·강원·전북·경남 등 6곳은 변동이 없었음
- '25.6월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F-3-3R)는 전국적으로 3명에 불과하였는데, 경남에 2명, 충남에 1명이 체류함

[표 2-1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우수인재(F-2-R) 동반가족 체류 추이

광역자치단체	2023.12	2024.12			2025.6		
	F-1-R	F-1-R	F-3-1R	계	F-1-R	F-3-1R	계
부산	14	14	36	50	7	62	69
대구	0	0	20	20	0	32	32
경기	28	25	50	75	26	65	91
강원	-	0	11	11	0	19	19
충북	57	35	139	174	30	198	228
충남	18	30	81	111	31	162	193
전북	147	42	328	370	30	444	474
전남	72	33	135	168	29	181	210
경북	148	70	227	297	52	343	395
경남	15	3	126	129	2	160	162
대전	-	-	-	-	-	3	3
광주	-	-	-	-	-	2	2
전체	499	252	1,153	1,405	207	1,671	1,878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표 2-14] 광역자치단체별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체류 추이

광역자치단체	2023.12	2024.12			2025.6		
	F-1-9R	F-1-9R	F-3-2R	계	F-1-9R	F-3-2R	계
부산	1	0	4	4	0	4	4
대구	0	0	1	1	0	1	1
경기	0	0	0	0	0	0	0
강원	-	0	0	0	0	0	0
충북	0	0	38	38	1	54	55
충남	2	3	29	32	3	46	49
전북	0	0	1	1	0	1	1
전남	0	0	12	12	0	17	17
경북	5	1	31	32	1	51	52
경남	0	0	0	0	0	0	0
전체	8	4	116	120	5	174	179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제 3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실태 분석

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체계 및 지원사업
3.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상의 주요 쟁점



### III.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이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은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임실군·순창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등 10곳이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익산시 1곳임
- 이에 따라,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1곳에서 운영이 가능함
- 이 중 고창군·김제시·남원시·부안군·순창군·정읍시 등 6개 시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그 외 지역은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2024년부터 운영 중임

#### 가.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추천 및 발급 규모

##### 1)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추천 인원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천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총 818명에 달함
- 이를 시군별로 보면 최다 추천 지역은 김제시로 누적 430명이 추천되었고, 그다음으로 정읍시(126명)·부안군(91명)·고창군(68명)·남원시(54명) 순으로 이어짐. 순창군(26명)을 포함해 사업에 비교적 늦게 참여한 임실군(16명)·진안군(4명)·장수군(2명)·무주군(1명)은 추천 인원이 저조함
- 다시 말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추천은 김제시·정읍시·부안군 등 3개 시군에 전체의 약 80%가 집중되는 양상이며, 특히 김제시는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이 매우 뚜렷함
-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네팔·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몽골·캄보디아·파키스탄·중국·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13개 국적자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베트남 추천 인원이 3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네팔(128명)과 방글라데시(87명)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즉,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베트남(47.7%)·네팔(12.6%)·방글라데시(10.6%)·미얀마(7.2%)·스리랑카(6.4%)·우즈베키스탄(5.7%) 등 6개 국적자가 전체의 90%를 상회하여 국적별로도 뚜렷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부분 시군에서 베트남 추천 인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미안마는 부안군, 네팔과 우즈베키스탄은 김제시, 방글라데시는 고창군, 스리랑카는 정읍시에서 비교적 많이 추천되는 경향이 있어, 시군별로 선호 국적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임

[표 3-1]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국적별 추천 인원('23~'25.7)

시군	베트남	미안마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기타*	계
고창군	17	1	8	4	0	0	1	30	6	1	68
김제시	212	18	91	5	35	8	9	25	21	6	430
남원시	28	2	7	0	0	2	2	11	1	1	54
부안군	36	32	7	0	2	3	4	3	4	0	91
순창군	11	4	2	0	2	3	0	4	0	0	26
정읍시	73	2	10	3	3	1	1	13	20	0	126
임실군	10	0	2	0	2	1	0	1	0	0	16
장수군	1	0	0	0	1	0	0	0	0	0	2
진안군	2	0	1	0	1	0	0	0	0	0	4
무주군	0	0	0	0	1	0	0	0	0	0	1
전체	390	59	128	12	47	18	17	87	52	8	818

\* 중국(4명), 인도네시아(2명), 키르기스스탄(1명), 타지키스탄(1명) 포함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부자료(2025.8.7.)

- '25.9.19. 기준, 2025~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추천 현황도 이상과 대동소이함
- 2025년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김제시(60명), 정읍시(19명), 부안군(10명), 고창군(6명), 임실군(2명), 남원시·장수군·진안군(각 1명) 등 총 100명임
  - 순창군과 무주군은 추천 인원이 없어 대응 방안 마련이 촉구됨
- 김제시·정읍시·부안군 등 3개 시군에 전체 추천의 약 90%가 집중되고, 남원시의 추천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등 이전보다 지역 간 편중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임
-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을 제외한 9개 국적자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음

- 베트남(59명)이 가장 많다는 점과 베트남(59.0%)·미얀마(16.0%)·네팔(9.0%)·우즈베키스탄(5.0%) 등 특정 국적에 편중된다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미얀마(16명)의 비중이 새롭게 두드러진 반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감소한 점이 확인됨
- 다만, 다년도 사업의 초기 단계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시군·국적 편중 현상과 시군별 선호 국적 양상은 향후 사업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표 3-2] 2025~26년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국적별 추천 현황('25.9.19. 기준)

시군	베트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계
고창군	3	3	0	0	0	0	0	0	0	6
김제시	<b>40</b>	4	4	3	3	4	0	1	1	<b>60</b>
남원시	0	0	1	0	0	0	0	0	0	1
부안군	1	<b>9</b>	0	0	0	0	0	0	0	<b>10</b>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정읍시	<b>13</b>	0	4	0	0	0	1	1	0	<b>19</b>
임실군	2	0	0	0	0	0	0	0	0	2
장수군	0	0	0	0	1	0	0	0	0	1
진안군	0	0	0	0	1	0	0	0	0	1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전체	<b>59</b>	<b>16</b>	<b>9</b>	<b>3</b>	<b>5</b>	<b>4</b>	<b>1</b>	<b>2</b>	<b>1</b>	<b>100</b>

\* 중국(4명), 인도네시아(2명), 키르기스스탄(1명), 타지키스탄(1명) 포함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부자료(2025.8.7.)

## 2)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신규 발급 인원

- 시범사업부터 '25.9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총 810명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새롭게 취득함
  - 시범사업부터 '25.7월까지 818명이 추천된 점을 고려하면, 추천 인원 대부분이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임
-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전체의 52.6%에 해당하는 426명으로 발급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정읍시(124명, 15.3%), 부안군(82명, 10.1%), 고창군(72명, 8.9%) 순으로 나타남. 그 외 시군은 상대적으로 발급 규모가 미미한 편임

- 시기별로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에는 400명 쿼터를 '23.6월에 100% 조기 달성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으나, 이후 쿼터의 지속 확대와 요건 강화가 맞물리면서 소진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가는 추세임
- 2023년도에는 김제시(145.5%)·정읍시(114.5%)·부안군(101.5%)이 쿼터를 초과 달성하기도 함. 이와 대조적으로, 순창군은 단 21명에 그치며 지역우수인재(F-2-R) 발급 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2024년도에는 달성률이 43.5%로 크게 낮아짐. 김제시(75.6%)·남원시(64.7%)·정읍시(55.3%) 등 3개 시군만이 50%를 넘겼으며, 나머지 7개 시군의 달성률은 매우 저조하였음. 특히 부안군(6명, 4.7%)·장수군(1명, 2.3%)·무주군(0명, 0.0%)의 성과는 크게 미흡한 수준임
  - 부안군은 시범사업 당시 쿼터를 초과 달성한 지역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단 6명 신규 발급에 그치며 성과가 크게 하락함
- 다년도(2025~26년)로 추진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쿼터가 연도별로 절반씩 배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25.9월 기준 달성률은 26.1%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도보다도 낮아진 수치임
- 김제시(41.3%)·정읍시(38.0%)·고창군(30.0%)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남원시(8.0%)·순창군(5.0%)·진안군(5.0%)·장수군(4.0%)·무주군(0.0%)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안군(20.0%)은 2024년도에 비해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임

[표 3-3]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신규 발급 추이

시군	2023			2024			2025~26			누계
	배정 인원	신규 발급		배정 인원	신규 발급		배정 인원	신규 발급('25.9)		
		인원	달성률(%)		인원	달성률(%)		인원	달성률(%)	
고창군	65	59	90.8	38	7	18.4	40	6	30.0	72
김제시	110	160	145.5	270	204	75.6	300	62	41.3	426
남원시	35	31	88.6	34	22	64.7	50	2	8.0	55
부안군	65	66	101.5	127	6	4.7	100	10	20.0	82
순창군	70	21	30.0	27	5	18.5	40	1	5.0	27
정읍시	55	63	114.5	76	42	55.3	100	19	38.0	124
임실군	-	-	-	57	16	28.1	40	2	10.0	18
장수군	-	-	-	43	1	2.3	50	1	4.0	2
진안군	-	-	-	16	3	18.8	40	1	5.0	4
무주군	-	-	-	15	0	0.0	36	0	0.0	0
전체	400	400	100	703	306	43.5	796	104	26.1	81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10.10.)

### 나.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체류 추이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도입 이후 '25.6월까지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 자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총 1,164명 증가하여, 이에 따른 도 내 인구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됨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북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3.6월 239명에서 '25.6월 690명으로 2년 사이 451명이 급증함
  - 도내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 취득 외국인의 동반가족은 '25.6월 기준 474명으로 집계됨
- 지역우수인재(F-2-R)와 그 동반가족이 지속적으로 주로 체류하는 도내 지역은 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남원시 등 5개 시군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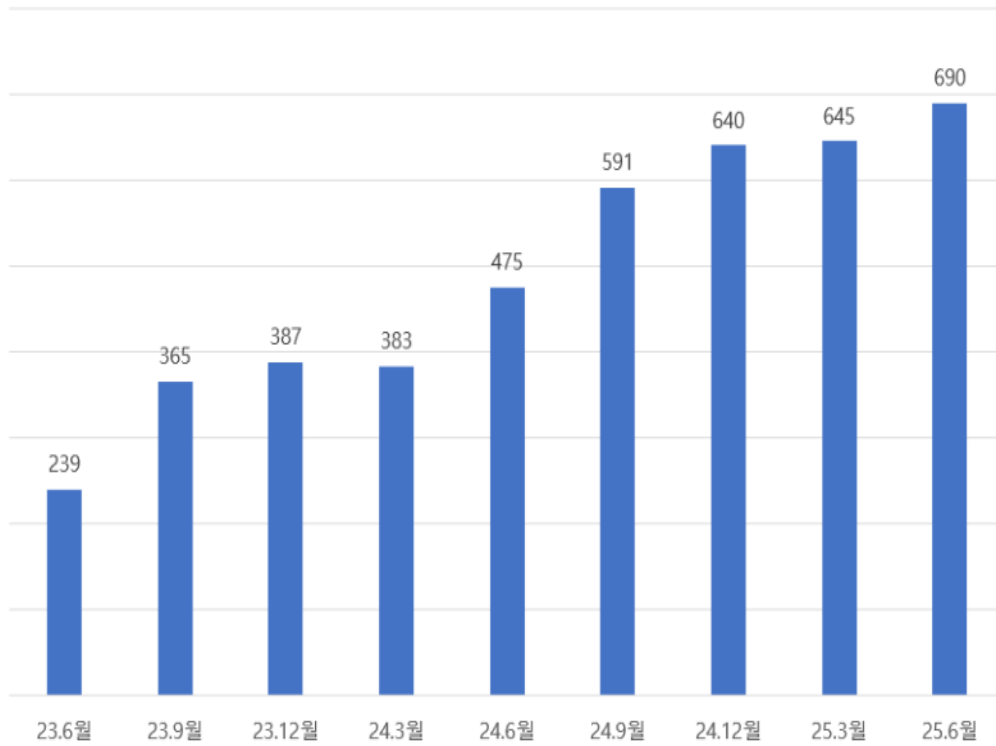
### 1)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2024년 초에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옴
  - 2023년 6월 239명에서 같은 해 12월 38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3월에 383명으로 소폭 감소하며 일시적 정체를 보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 6월 475명, 9월 591명, 12월 640명으로 600명대를 넘어섰으며, 2025년 6월 기준 690명(전국의 22.1%)으로 체류 규모가 확대됨
-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남원시 순으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체류 인원이 많으며, 이러한 순위는 2023년 이후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음
  - 김제시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23.6월 96명에서 '24.6월 219명, '25.6월 33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옴. 같은 기간 정읍시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는 50명에서 79명, 113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옴. 이외의 다른 시군은 대체로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장수군·진안군·무주군 등 3개 시군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극히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등 4개 시군에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가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됨
- 특히 전주시의 경우,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23.6월에 2명이었지만 '25.6월에 33명으로 증가함. 이는 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남원시에 이어서 6번째로 큰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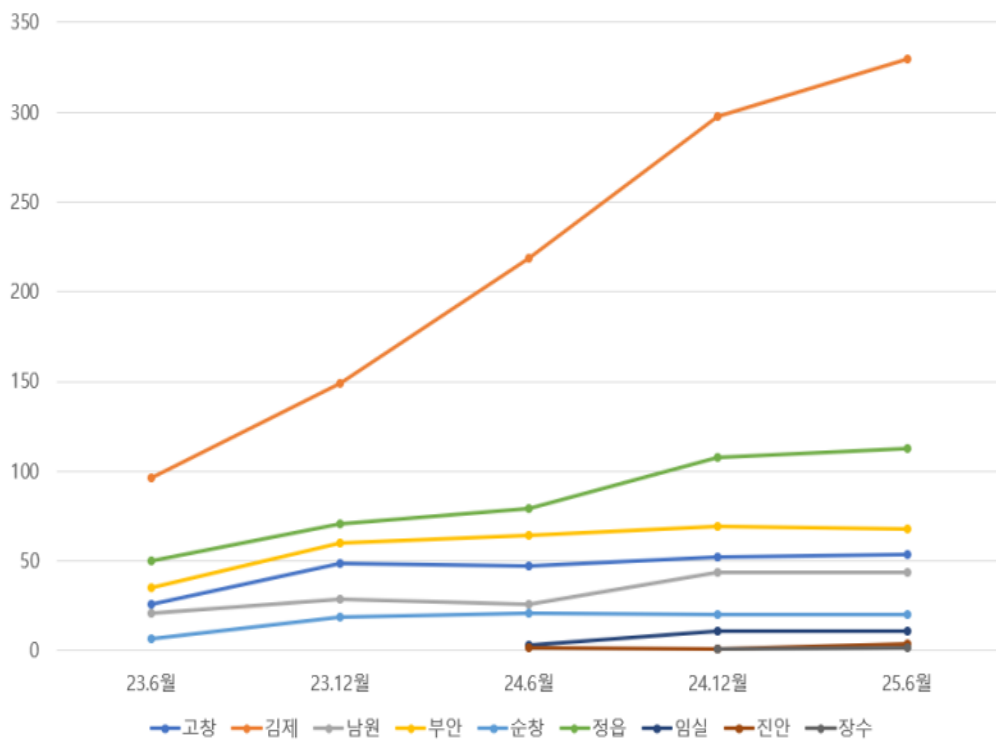
[표 3-4]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시군	'23.6	'23.12	'24.6	'24.12	'25.6	
고창군	26	49	47	52	54	
김제시	96	149	219	298	330	
남원시	21	29	26	44	44	
부안군	35	60	64	69	68	
순창군	7	19	21	20	20	
정읍시	50	71	79	108	113	
임실군	-	-	3	11	11	
장수군	-	-	0	1	2	
진안군	-	-	2	1	4	
무주군	-	-	0	0	0	
기타	군산시	1	1	1	3	3
	익산시	0	0	1	6	6
	전주시	2	8	11	24	33
	완주군	1	1	1	3	2
전체	239	387	475	640	690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그림 3-1]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그림 3-2] 전북자치도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체류 추이

## 2)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

-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은 '25.6월 기준 474명으로, 전국의 25.2%를 차지하는 수준임
-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동반가족 수는 '24.6월 234명에서 같은 해 12월 370명, '25.6월 474명으로 빠르게 확대되며 1년 사이 240명이 증가함
- 이러한 변화는 국내출생자녀(F-1-R)가 아니라 배우자·미성년자녀(F-3-1R)의 규모 확대에 의한 것임
- 동반가족의 체류 추이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출생자녀(F-1-R)는 '23.6월에 29명에서 같은 해 12월 147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4.6월 72명, '24.12월 42명, '25.6월 30명으로 크게 줄어들음
- 이와 대조적으로, 배우자·미성년자녀(F-3-1R)는 '24.6월 162명에서 '24.12월 328명, '25.6월 444명으로 반기마다 100명 이상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도입으로 인해 관련 비자가 신설된 이래로 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남원시 순으로 동반가족 체류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각 시군에 체류하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은 '25.6월 기준 김제시 239명, 정읍시 69명, 고창군 60명, 부안군 35명, 남원시 30명 순이었음. 특히 전북 전체의 50.4%에 달하는 지역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이 김제시에 집중됨
  - 또한, '23.12월 기준 국내출생자녀(F-1-R)는 김제시 65명, 정읍시 30명, 고창군 26명으로, 6개월 전보다 각각 24~47명이 증가함. 이때부터 이들 3개 시군에 편중된 양상이 고착화됨
- 반면 임실군·장수군·진안군·무주군 등 4개 시군은 2024년에는 국내출생자녀(F-1-R) 또는 배우자·미성년자녀(F-3-1R) 체류 사례가 없었으며, '25.6월에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가 체류하고 있는 전주시·익산시·군산시 등 3개 시군에 그 동반가족들도 일부 체류하고 있음. 다만, 그 규모가 전주시·익산시 각 11명, 군산시 3명으로 크지는 않음

[표 3-5]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 체류 추이

시군	'23.6	'23.12	'24.6			'24.12			'25.6			
	F1R	F1R	F1R	F3R	계	F1R	F3R	계	F1R	F3R	계	
고창군	0	26	5	40	45	3	56	59	1	59	60	
김제시	18	65	37	60	97	20	157	177	16	223	<b>239</b>	
남원시	2	13	6	14	20	3	25	28	3	27	30	
부안군	3	6	6	18	24	3	29	32	0	35	35	
순창군	0	3	2	5	7	0	9	9	0	10	10	
정읍시	6	30	14	23	37	9	41	50	7	62	69	
임실군	-	-	0	0	0	0	0	0	0	4	4	
장수군	-	-	0	0	0	0	0	0	0	0	0	
진안군	-	-	0	0	0	0	0	0	0	2	2	
무주군	-	-	0	0	0	0	0	0	0	0	0	
기타	군산시	-	1	1	-	1	1	-	1	1	2	3
	익산시	-	1	1	-	1	3	4	7	2	9	11
	전주시	-	2	-	2	2	-	7	7	-	11	11
전체	<b>29</b>	<b>147</b>	72	162	<b>234</b>	42	328	<b>370</b>	30	444	<b>474</b>	

자료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추진 현황

-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의 외국인인 도내 11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8개 시군에 체류하고 있으며, '25.6월 기준 총 45명으로 집계됨
- 이들은 정읍시 11명, 김제시 9명, 고창군 7명, 익산시 6명, 진안군 5명, 남원시 4명, 순창군 2명, 부안군 1명 순으로 분포하며, 임실군·장수군·무주군 등 3개 시군에서는 아직 체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같은 시점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취득자의 동반가족은 아직 전북지역에는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3-6]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취득자 체류 현황('25.6월 기준)

시군	체류 인원
고창군	7
김제시	9
남원시	4
부안군	1
순창군	2
정읍시	11
임실군	0
장수군	0
진안군	5
무주군	0
익산시	6
전체	45

자료 : 법무부, 2025,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그러나 '25.9월 추천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과 그 동반가족(F-3-3R)의 도내 체류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5.9.19.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으로 324명이 추천되었는데, 이는 2025년도 전북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통합 쿼터(433명)의 74.8%에 해당하는 규모임
- 시군별로 보면, 김제시(94명)·익산시(73명)·정읍시(52명) 등 3개 시군에서 추천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고창군(26명)·부안군(25명)·남원시(22명) 등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가 추천됨. 반면 진안군(9명)·임실군(8명)·순창군(6명)·장수군(5명)·무주군(4명) 등은 각각 10명 미만으로 추천 인원이 제한적임
- 국적별로는 총 11개 국적자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네팔이 130명으로 현저히 많았고, 캄보디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미얀마가 각각 32~38명 수준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태국 순으로 이어짐

II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II

- 특히 김제시와 익산시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으로 추천됨

[표 3-7] 전북자치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국적별 추천 현황('25.9.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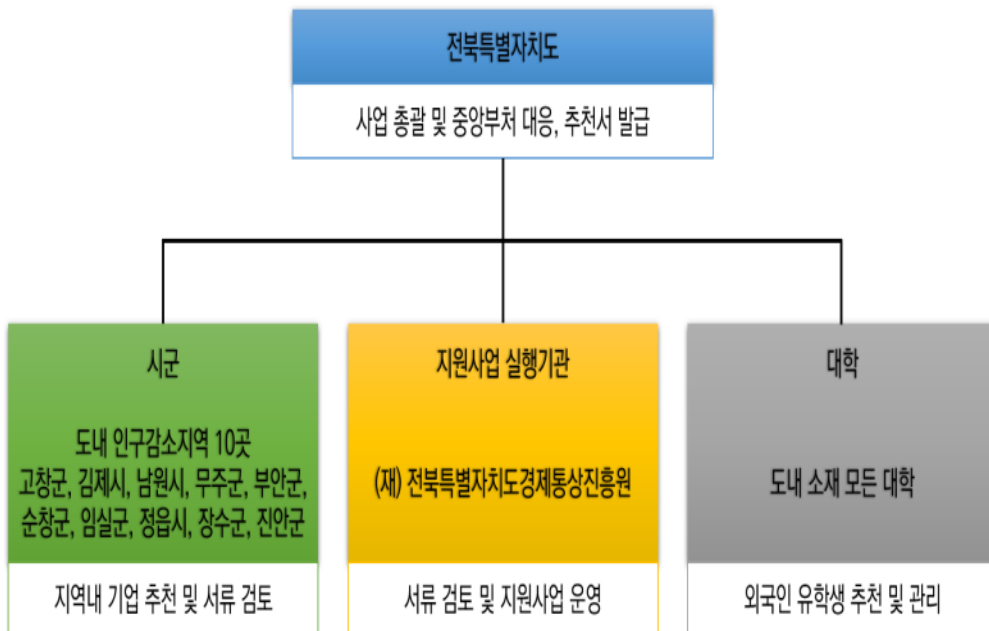
시군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계
고창군	7	1	1	8	9							26
김제시	38	9	7	11	9	4	8	4	1	2	1	94
남원시	11	1	2	3	2	1	2					22
부안군	10	2	7	4					2			25
순창군	2	2		1	1							6
정읍시	29	2	8	6	3		1		3			52
임실군	2	2	2			2						8
장수군	2		1						2			5
진안군	7			1	1							9
무주군	3		1									4
익산시	19	19	8	2	7	7	1	7	3			73
전체	130	38	37	36	32	14	12	11	11	2	1	324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5, 지역특화형 비자 모집 현황

##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체계 및 지원사업

### 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체계는 전북도-10개 시군-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내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총괄 기관으로서, 지자체 쿼터 조정, 지역우수인재(F-2-R) 추천명단 취합, 중앙부처(법무부) 협의 및 대응, 추천서 발급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김제시·정읍시·부안군 등 10개 시군은 수요 파악 및 1차 검토 역할을 맡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 내 기업(근무처) 추천, 제출 서류 검토, 지자체 배정 인원에 따른 추천명단 작성 및 도(광역자치단체) 송부 등을 수행함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으로써, 서류 적격성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지원사업 운영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함
  - 도내 대학은 유학(D-2)에서 지역우수인재(F-2-R)로 비자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관리함
- 그러나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F-1-R)의 정착지원과 체류 현황 관리에 대한 전담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그림 3-3]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 추진체계

- 게다가 10개 시군은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고창군·김제시·남원시·부안군·정읍시·임실군·장수군·진안군 등 8개 시군의 경우, 담당자 1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사회적경제 업무 총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일자리 종합대책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임
- 아울러 고창군·김제시·남원시·부안군·정읍시·장수군·진안군 등 7개 시군은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임실군은 여성가족과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순창군·무주군은 전담 조직이 부재하는 등 시군별 운영 체계와 대응 관점에 편차가 존재함

[표 3-8] 전북자치도 인구감소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 추진체계 및 담당자 업무

시군	조직	담당자	지역특화형 비자 외 담당 업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산단관리팀	주무관 1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뿌리기업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사업, 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사업, 홈페이지 관리, 팀 서무
김제시	새만금경제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1인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
남원시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1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단지 통근버스, 행복주택,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광치복합문화센터, 화재폐기물 처리비, 중소기업 등 단체
부안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팀장 1인	일자리정책 및 창출업무 총괄, 사회적경제 업무 총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
순창군	-	-	-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주무관 1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노정일반, 정읍시 명장 선정,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신중년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임실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주무관 1인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국인 정책 업무 추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주무관 1인	일자리 종합대책수립 및 일자리시책 발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농촌인력관련업무, 농촌인력중개센터관리,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진안군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주무관 1인	진안청년센터 및 쉼어하우스 조성,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신중년 취업지원, 청년나래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진안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일자리종합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기타 일자리 지원사업
무주군	-	-	-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 나.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지원사업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정착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중임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기반 비자로 전환 후 3개월 이상 도내에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비자 승급 지원금(3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또한, 체류자격 요건·신청 절차·혜택 등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지역우수인재(F-2-R) 취득 선배 외국인의 멘토링, 이력서 컨설팅, 노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일자리·채용 박람회도 운영되고 있음



[그림 3-4]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연계 외국인 일자리·채용 박람회

- 나아가 ‘전북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형 JOB투어’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운영하고, 도내 중견기업·지역 호텔 등 지역특화형 우수기업을 견학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계함

- 2026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4조·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 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이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중 모범 기업체를 선정해, 고용주·내국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행사 등 사회통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제고하고자 함

### 3.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상의 주요 쟁점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내 4년제 대학 등 유관기관 담당자 총 6인(기관별 1~2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
- 그 결과, 전담 기관 부재, 시군 간 일자리·정착지원의 편차, 정주 유도 요인 부족,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비자 요건 등 여러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운영상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됨
- 이러한 제약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을 통한 인구·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 전담 기관 부재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전담 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F-1-R)의 유입·정착·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취업팀에 소속된 선임담당관 1인과 담당관 3인 등 총 4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접수부터 서류 검토·보완 안내, 추천 명단 작성 및 도 송부, 추천서 배부, 외국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기업 발굴, 사업 만족도 조사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 인력 규모로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남
- 실제로 현장 실무자들은 비자 신청 접수, 서류 검토·보완 안내 등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이미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기업 발굴, 현장 면접 동행, 영세 기업 대상 지원, 지역우수인재(F-2-R)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실상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함
- 아울러, 지원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역량 강화·교육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부재하여 기업 간 지역우수인재(F-2-R) 비

자·채용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가 어려워 수행기관으로 일자리 매칭 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도내 지역우수인재(F-2-R) 체류 규모가 가장 큰 김제시조차도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을 전담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기업 및 지역 우수인재(F-2-R)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인-구직을 적절하게 매칭하기가 쉽지 않음
- 더불어, 사업이 주로 일자리 관점에서 접근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취업에 비해 교육·주거·생활·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정착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따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기관을 구축하고,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전담 기관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체류자격 안내, 교육, 구직 지원, 기업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운영, 대학 국제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경상북도 사례를 적극 참고해 볼만 함

## 나. 시군 간 일자리·정착지원의 편차

- 시군별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담당 조직, 업무 체계, 정착지원 수준, 일자리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도 단위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취약 지역의 인구·경제 활력 효과를 일정 수준 균등하게 제고하기가 어려움
- 우선, 시군 내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며, 시군별 담당 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일례로, 남원시와 정읍시는 외국인정책이나 외국인·재외동포 업무를 인구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은 기업지원팀 또는 일자리정책팀이 운영하는 등 업무가 분리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남원시·정읍시·김제시·고창군·장수군·진안군 등 6개 시군은 근로자 관점에서, 임실군은 다문화가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순창군·무주군은 담당 조직 자체가 부재함
-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에 대한 정착지원의 적극성도 시군별로 상이함. 예를 들어, 시범사업 당시 시군별 정착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김제시는 정착지원금·한국어 교육·취업상담회·정기 간담회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기업인과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등 정착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설계하

였음. 반면 다른 시군은 정착지원 분야가 제한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구조는 이러한 시군 간 편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주·군산·익산·원주 등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산업단지를 포함한 주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들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인구감소지역과 근무지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군 간 협력체계가 요구되지만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일자리 밀집 지역과 멀리 위치할수록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유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
- 이에 일자리가 많은 비(非)인구감소지역 근교 사업지(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정착 타운을 조성하여 거주지-근무지 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비(非)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의견도 제시됨
-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시군별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되 취약 지역을 위한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북 전체의 인구·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군별로는 정착지원·관리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외국인친화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

[표 3-9]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정착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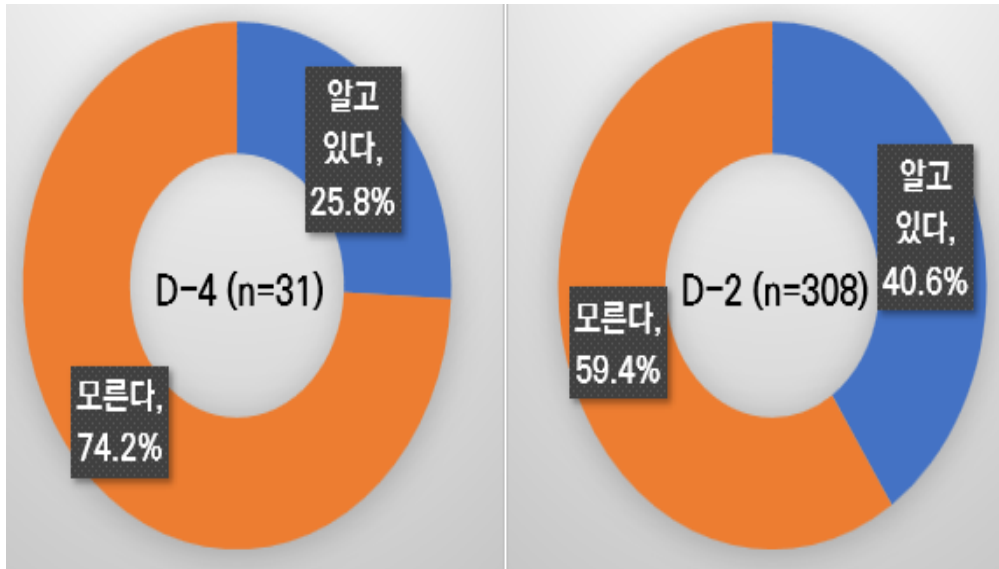
시군	정착지원 방안	주요 내용
정읍시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동아리
남원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기업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1인당 100만원 지급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 초급~실생활 과정, 토픽 대비, 한국어 귀화시험 대비 등
	외국인유학생 관내 중소기업 취업상담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과 관내 중소기업 간 취업상담회 실시
	외국인유학생 취업 및 지역정착 지원 교육	- 기업인 대상 : 외국인유학생 본국에 대한 정보 및 외국인 유학생 취업 안착을 위한 관리 교육 - 외국인유학생 : 김제시 지역 정보, 한국문화 이해, 취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외국인유학생 취업 및 지역정착 지원 정기 간담회	외국인인력 취업 후 지역정착 수시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제공, 취업 후 애로사항 청취,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순창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기업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동아리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기업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 제공
고창군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지역안정 정착유도를 위한 나눔바자회, 힐링문화체험, 취미활동 육성지원 등 추진
부안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기업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교육, 국적취득반 운영, 직업훈련 교육 운영 등

자료 : 법무부, 20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별 정착지원방안

#### 다. 정주 유도 요인 부족

- 전국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쿼터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지역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체류·취업 지역으로 적극 고려·선택할 만한 차별화된 유인책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낮은 실정임

- 무엇보다도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비(非)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F-1-R)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으로의 정착 및 장기 체류가 기피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정착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도 차원의 지원은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정도에 그쳐 외국인의 입장에서 전북을 장기 체류지로 선택해야 할 유인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외국인은 가족 단위로 체류할 때 정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강점 중 하나가 동반가족 초청 및 배우자 취업 허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우수인재(F-2-R)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로 정착·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전북은 배우자 취업 연계 미흡, 자녀 보육·교육 관련 지원 부족 등 가족 관련 정책적 공백이 크게 남아 있음
- 더불어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 가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및 정주를 위한 지원은 대부분 시군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구조이지만, 초기 적응에 핵심적인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수요-공급이 불일치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만족도가 낮음
  - 전북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거점운영기관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완주)·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익산) 등 2곳이고, 일반운영기관은 전주 3곳, 군산 4곳, 정읍 2곳, 완주·임실·장수·남원·진안·부안·김제·고창·순창·익산 각 1곳 등 총 19곳임
-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내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글로벌대학30·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광역형 비자(유학 유형)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에서 유치·육성한 지역 인재가 졸업 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여 지역우수인재(F-2-R)로 전환·정착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하여 지역을 이탈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서연미 외(2025)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344명 중 60.5%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연수생(D-4) 인지도는 25.8%, 유학생(D-2) 인지도는 40.6%에 불과함. 그럼에도 전체 응답자의 59.0%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잘 모르겠음 27.6%, 의향 없음 13.4%), 도내 유학생의 지속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가 지적됨



자료 :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그림 3-5]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인지도

- 이러한 정주 기반 부족은 지역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F-1-R)의 장기 체류 의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인구의 도외 유출로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성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D-2)·구직자(D-10) 등 잠재적 지역우수인재, 지역우수인재(F-2-R),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3-1R, F-1-R)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로 지역 인지도와 정주 매력도를 제고하여야 함

## 라.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비자 요건

- 지속해서 개편되어 온 지역특화형 비자(F-2-R) 요건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다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전북지역은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심하지만, 그중에서도 영세한 기업은 더욱 취약한데 비전문취업(E-9) 대상 제외, 출신국 비율 및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등의 요건 강화가 지역우수인재(F-2-R) 유입·활용의 병목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도내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베트남 국적자가 현저히 많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국적 비율 제한으로 인해 구인·구직 실수요가 있더라도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여 구인난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비전문취업(E-9)에서 전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어 능력 요건 또한 현장의 의견과 상충됨. 시범사업 당시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였던 기준이 정식사업 전환 후 토픽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로 상향되었는데, 전북지역의 대다수 제조업·식품가공업의 직무 특성상 기존과 같이 토픽 3급 수준으로도 업무 수행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한국어 능력 강화는 장기 체류·사회통합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인력 확충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귀결됨
- 이처럼 요건 강화·짚은 제도 개편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참여자·추천 인원 축소, 도내 기업 참여 의지 약화, 담당 인력의 행정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므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건 설계·개편이 필요함





## 제 4장

### 지역우수인재(F-2-R) 심층면접 조사 분석

1. 지역우수인재(F-2-R)·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개요
2. 지역우수인재(F-2-R) 외국인의 전북지역 생활·정착 경험
3. 기업 인사 담당자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



## IV. 지역우수인재(F-2-R) 심층면접 조사 분석

### 1. 지역우수인재(F-2-R)·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개요

#### 가. 조사 개요 및 절차

##### 1) 조사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의 생활·정착 경험과 비자 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주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심층면접 조사를 시행함
- 도내에 체류 중인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동반가족·의료·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의 어려움과 만족도, 비자 제도와 관련된 고충 및 의견, 필요한 지원정책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

##### 2)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중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외국인인 국적, 성별, 연령대, 동반가족 유무, 거주지·근무지, 업종 등 다양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함. 인사 담당자 역시 업종과 지역이 서로 다른 기업 소속으로 구성하여 이질성이 확보되도록 함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우수인재(F-2-R) 국적별 추천·체류 분포를 고려하여, 베트남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네팔·방글라데시·미얀마 국적자, 김제시·정읍시·부안군 체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을 수행하는 유관기관(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군, 외국인 고용 기업 등) 담당자에게 조사 목적·방법·내용·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대상자 추천을 요청함. 현장 실무자가 추천하거나 직접 섭외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외국인 및 기업 인사 담당자로부터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함

##### 3) 조사 방법 및 기간

- 심층면접 조사는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2인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됨

- 모든 면접은 한국어로 실시되었으며, 1회당 약 1~2시간이 소요됨. 전체 면접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7주간 이루어짐

#### 4) 주요 내용 및 분석

- 면접 내용은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됨. 우선 조사 참여자의 기본적 배경을 파악한 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관련 사항, 거주지로서의 전북에 대한 의견, 일자리 경험, 동반가족 관련 사항, 정주 여건, 사회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표 4-1] 지역우수인재·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주요 내용

영역	면접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한국/전북 체류기간, 체류자격(이력, 희망),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li> </ul>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인식, 이해도, 정보 접근 경로</li> <li>• 수요, 추천 의향, 현황, 추이, 비자 간 비교</li> <li>• 전환·갱신 경험, 전환·갱신 과정상 어려움,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비자 주요 요건 및 개편 관련 의견</li> <li>• 전반적 만족도, 총평(강점/성과/한계)</li> <li>•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li> </ul>
전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이주 동기, 생활·체류 만족도, 고충, 지속 체류·정주 의향/이유, 전북 외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유입·정주 매력도 제고 방안</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 경험, 채용·고용 경험, 어려움</li> <li>• 근로 조건·근무 환경(업종, 직종, 종사상 지위, 월평균임금, 주당 근로시간, 기업 규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 업무/고용 만족도</li> </ul>
동반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가족 초청 의향/여부, 현황, 근속·정주에 미치는 영향, 가족단위 체류·정착 어려움, 배우자 취업 여부 및 애로사항, 자녀 교육·양육·돌봄 고충</li> </ul>
정주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점유 형태, 주거 관련 어려움, 주거 지원</li> <li>• 교통·문화·언어/통역 등 일상생활 관련 지원·애로사항</li> <li>• 건강 상태,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어려움</li> <li>• 안정적 정착·정주 최소요건, 필요한 정착·정주지원</li> </ul>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차별·조정 경험</li> <li>• 지역사회 모임·커뮤니티 유무, 이용 경험, 도움 요청 대상</li> </ul>

-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후 녹취록을 작성한 뒤 반복적으로 검토함. 이를 토대로 주요 영역을 범주화하고,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를 도출·체계화함. 특히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한 인식과 애로사항, 전북지역에서의 생활·일자리 경험, 정착·정주 지원 요구, 동반가족 관련 어려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음

## 나. 조사 참여자 특성

- 지역우수인재(F-2-R)·기업 인사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 5명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2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5명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 남성이며, 한국 체류기간은 8년 이상으로 비교적 긴 편임. 대다수가 현재 배우자와 함께 체류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국적은 네팔 3명, 방글라데시 1명, 미얀마 1명임. 이들은 모두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하였는데, 김제시·정읍시에 각 2명, 부안군에 1명이 체류하며 근무하고 있음
- 인사 담당자 2명은 각각 김제시에 있는 제조업 기업과 부안군에 있는 식품가공업 기업에서 근무하며, 지역우수인재(F-2-R)를 포함한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채용·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4-2]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국적	성별	연령대	체류기간	F-2-R 비자 취득	동반가족	거주지역	근무지역	업종	
지역 우수 인재 (F-2-R)	A1	네팔	남성	20대 후반	8년	'24년	배우자	김제	김제	제조업
	A2	네팔	남성	20대 후반	9년	'24년	배우자	김제	김제	제조업
	A3	방글라데시	남성	30대 초반	8년	'23년	배우자	정읍	정읍	제조업
	A4	네팔	남성	30대 초반	8년	'23년	배우자	정읍	정읍	제조업
	A5	미얀마	여성	20대 중반	5년	'23년	없음	부안	부안	식품가공업
기업 인사 담당자	B1							김제	김제	제조업
	B2							부안	부안	식품가공업

## 2. 지역우수인재(F-2-R) 외국인의 전북지역 생활·정착 경험

### 가.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경험 및 제도 인식

#### 1) 체류자격 전환 경험과 장기 체류 의향

- (체류자격 이력)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의 직전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구직(D-10) 등으로 다양함
  - A1과 A5는 유학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졸업 후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 상태를 거쳐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으로 전환한 사례임. A1은 국내에서 일반연수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일반기능인력(E-7-3) 자격으로 취업하여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약 3년간 체류하였으며, 약 1년 전 전북도(김제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취득함. A5도 전북 전주시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구직 과정을 거쳐 전북도(부안군)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취득함
  - 이와 달리 A2~A4는 비전문취업(E-9) 또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다가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으로 전환한 사례임. A2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8년간 근로하다가 약 1년 전 전북도(김제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취득함. A3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경상남도 창원군과 대구 달성군에서 총 6년간 근로하다가 약 2년 전 전북도(정읍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A4 역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경기도·전북 완주군·전북 정읍시 등에서 약 5년간 근로한 후 약 2년 6개월 전 전북도(정읍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취득함. 다만, 현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 자격에서 지역우수인재(F-2-R)로 직접 전환하는 A3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표 4-3]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별 체류자격 이력

조사 참여자	체류자격 이력
A1	일반연수(D-4, 2년) → 유학(D-2, 2년) → 일반기능인력(E-7-3, 3년/전남 목포시) → 지역우수인재(F-2-R, 1년/전북 김제시)
A2	숙련기능인력(E-7-4, 8년/충북 진천군) → 지역우수인재(F-2-R, 1년/전북 김제시)
A3	비전문취업(E-9, 5년/경남 창원군) → 비전문취업(E-9, 1년/대구 달성군) → 지역우수인재(F-2-R, 2년/전북 정읍시)
A4	비전문취업(E-9, 1년/경기) → 비전문취업(E-9, 1년/전북 완주군) → 비전문취업(E-9, 3년/전북 정읍시) → 숙련기능인력(E-7-4, 1달/전북 정읍시) → 지역우수인재(F-2-R, 2년 반/전북 정읍시)
A5	유학(D-2, 2년/전북 전주시) → 구직(D-10, 1년/전북 전주시) → 지역우수인재(F-2-R, 2년/전북 부안군)

- (체류자격 전환 경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에는 일반적으로 약 1개월~1개월 반 정도가 소요되어 절차 기간은 크게 부담되지 않음.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 과정 전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불안감,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준비의 어려움, 근로계약 기간과 비자 기간 간 미스매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A2와 A4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승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먼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거나 기존 비자를 연장한 상태에서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환함
  - 필수 제출 서류 준비는 대체로 어렵지 않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미얀마 국적자의 경우는 본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8개월 이상을 소요하기도 함
  - 또한, 일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비자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비자 전환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전북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응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여 불쾌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함

“예전에는 E-7-4 비자에서 F-2-R로 (전환이) 가능했어요. 그냥 이적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요즘은 그거 근로 계약서는 꼭 지켜야 되니까 좀 근로계약 기간이랑 비자 기간이 좀 안 맞아서 F-2-R로 오기 좀 힘들어해요.” (A2)

“저는 대구에 있을 때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봤는데 비교해 보면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좀 까다로워요. 거기 직원들이 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라고 따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행동이나 말도 좀 심해요, 제가 볼 때는.” (A3)

- (향후 체류자격 희망) 조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한국에 정착·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으나, 소득 기준 등 영주 자격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어, 지역우수인재(F-2-R)에서 영주 비자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막연한 희망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현재 F-2-R 비자 만료 이후에도) 아직은 연장해서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A1)

“(영주할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 사실 (제가) 우리나라(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 까지만 졸업을 해서... 근데 지금은 여기서 졸업 안 하면, 한국에서 졸업 안 하면 그 연봉이 200% 못 넘으니까 그거(실제로 영주 비자 취득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냥 F-2-R 있다가 대학교에 다닐지도 몰라요. 생각하고 있어요.” (A3)

“5~7년 정도는 한국에 더 살 생각 있어요. (영주할) 생각은 있는데 영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학교 다녀야 하니까 아니면 GNI 그거(기준) 있잖아요. 영주는 200%. 나 같은 경우는 200% 있어야 되니까 내가 못 맞출 것 같아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A4)

## 2) 지역특화형 비자 정보 접근 경로 및 한계

- (정보 접근 경로)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정보는 주로 공적 채널이 아닌 개인적 탐색(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친구·행정사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되고 있음
- (정보 접근 한계) 이처럼 공식적 안내·교육·문의를 통한 정보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신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게... (중략) 익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고 군산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군산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니래요. 근데 검색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A2)

“나는 E-7-4 (비자) 만들려고 계속 공부했는데, 그때 집(네팔)에 갔다 올 때 F-2-R (비자) 있다고 하니까 F-2-R (비자) 신청했어요. 그때 뭐 (쿼터) 61명 중 59명은 (이미 추천서) 주고, 2명만 남았잖아요. 그때 내가 서류 제출하고 그때 받은 거예요. 집(네팔)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거 F-2-R (비자) 있는지 몰랐어요. 집(네팔)에 있을 때도 모르고, 여기 와서 바로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알려줬고... (중략) (비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다 알아봐야 해요. 친구 바꾸면 친구랑 통화하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행정사 여기 우리 네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A4)

“토픽 5급이에요. (토픽은 2년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데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A5)

## 3)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선호 요인과 취득 제약

- (높은 선호도와 이유) 지역우수인재(F-2-R) 비자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주된 이유로는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동반가족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장기 체류의 안정성 보장, 향후 영주 비자 전환 시 요건 완화 혜택 등이 꼽힘
- 특히 가족이 함께 생활·체류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동반가족이 있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은 잦은 이직이나 조기 이탈의

가능성이 낮고, 근속 기간이 길며 업무 책임감이 동반가족 없이 머무르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임

“F-2-R(비자)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좋아서. E-7-4R(비자)은 여기 농사 아니면 식당 이런 데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F-2-R(비자)은 그런 거 없고 다 되니까 F-2-R(비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와이프랑 같이 돈 버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왜냐하면 와이프꺼(배우자 임금)는 다 소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버는 거는 다 저축하고 그러는데, 와이프 집이 네팔에 있으면 그냥 내가 돈 보내줘야 하잖아요.” (A4)

“(F-2-R 비자 취득하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급여 차이가 많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도 한국에 같이 살 수 있는 것들. (나중에 가족 초청할) 생각 있어요.” (A5)

“F-2-R(비자)로 바꾸면은 여기 배우자는 한국에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더 오래 살게 되면은 F-5(영주) 비자 같은 거 신청할 때 F-2-R 가지고 오면 좀 편리하게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F-2-R 관심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A2)

“왜냐하면 그때 들었거든요. F-2-R(비자)을 만약에 갖게 되면 5년 F-2-R 비자로 일하다가 바로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F-2-R 비자 취득을 원했었어요.)” (A3)

- (요건 변경으로 인한 F-2-R 비자 취득 어려움) 지역우수인재(F-2-R) 비자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어 능력 요건이 토픽 4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주요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 충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됨

“(F-2-R 비자)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 근데 조건이 좀 있잖아요?! 조건 때문에 (F-2-R 비자)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중략)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어 조건 쉬워도 ‘그냥 나중예, 나중예 하겠어.’ 그냥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토픽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수 요건이) 3단계, 4단계로 나오니까 그것도 신청하기도 좀 힘들고...” (A1)

- 아울러 비전문취업(E-9)에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의 직접 전환이 불가하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여전히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이 생겨남

- (F-2-R 비자 대안으로서의 E-7-4R 비자 수요 증대)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인 대안적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의 전환을 택하는 추세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친구들도, 제가 추천 안 해도 친구들도 다 F-2-R(비자로 전환)하고 싶대요. (웃음) 근데 자격이 없어서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바로 E-9(비전문취업)에서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다른 E-9(비전문취업) 친구들이. ‘아, 왜 그때 우리 왜 안 했어?’ 제가 E-9(비자)에서 바로 F-2-R(비자로) 왔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A3)

“*(비전문취업 E-9 외국인인)* 나중에 조건 맞추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 2명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가족 초청까지 가능하니까... 나중에 와이프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해요.” (A1, A2)

## 나. 전북지역 이주 경험 및 정착·정주 유도 과제

### 1) 전북지역으로의 이주 동기

- (전북으로의 이주 동기) 국내 타 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이주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전북지역 체류 자체가 목적이거나보다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체류지로 선택했거나, 전북지역 산업 구조상 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어 이를 따라 이주를 결정한 경우임
- A2는 충북 진천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을 위해 전북 김제시로 이주함. A3는 대구에서 지속 체류를 희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지역우수인재(F-2-R) 쿼터가 소진되자 비자 신청·발급이 가능한 전북 정읍시로 체류지를 이전함

(F-2-R 비자 취득하면서 전북지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략) 진천군은 인구 감소지역 아니라서 여기(전북) 인구감소지역으로 왔어요.” (A2)

“거기서(대구 달성군) 여기 바로 F-2-R (비자) 받고 여기로(전북 정읍시) 오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벌써 대구에 쿼터가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정읍에 쿼터가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정읍으로 오게 된 거예요, F-2-R 비자 받기 위해서. (중략) 처음에는 이쪽은 아예 몰랐어요.” (A3)

- A1과 A4는 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전북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특히 A1은 자동차 관련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전북 김제시에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함

“목포 원래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에요. *(전남지역에 목포는 아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있었어요. 영암군인데, 근데 거기가 조선소 일이라서 일도 *(제 전공이랑)* 안 맞고, 생활도 조금 불편해서 그냥 여기*(전북 김제시)*로 올라왔어요.” (A1)

“경기도 좋은데 근데 내가 맞는 일이 여기*(전북 정읍시)*에 있으니까 여기로 왔어요.” (A4)

## 2)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유

- (낮은 직장 만족도로 인한 이주 의향) 일자리나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더 나은 일자리 조건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가게 되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야 돼요. 임금도 더 받고 일도 좀 쉬운 일...” (A1)

“여기는 좀 힘들어요. 먼지도 좀 많고, 무거운 것 들어야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A2)

- (지역사회 적응 수준에 따른 이주 의향) 지역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서도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즉, 처음 정착하여 익숙해진 지역을 심리적 거점(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속 체류·정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 A3는 한국 이주 초기 단계에 머무른 대구에 대한 애착이 커서 대구로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음. 반면에 A5는 첫 정착지가 전북지역이었고, 지속적으로 전북에서 생활해 온 영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음. A4 또한 전북지역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저는 가고 싶은 지역이라고 물어보면 대구로 가고 싶어요. *(마음의 고향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쪽에는*(대구에는)*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나 도움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A3)

“지금 여기 정읍에 와서는 그때까지는(완주에 살 때까지는) 익숙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좀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정읍 와서 계속 일하면서는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중략)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 거의 없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갈 수도 있고... 근데 갈 생각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와이프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A4)

### 3) 전북지역 유입·정주 매력도 제고 방안

- (홍보 및 적응·정착지원) 국외 및 도외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및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보유 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스스로 전북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였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확충 및 보완 방안) 동시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등 전북의 취약한 일자리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입·정착 지원정책 수요) 구체적으로, 주거임대료·보육료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정착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외국인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생활·행정 편의 제고,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자기계발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의 지원정책 수요를 반영해야 함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기 대구, 그... 경상북도 대구는 F-2-R 비자 받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 120만 원 지원금 있고, 유치원비 있고, 그런 거 지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지원금 주면, 전북으로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A1)

“대구에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원래 제가 대구에 있을 때 5년 중 4년간 외국인센터나 복지관 그런 데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정읍에) 와보니까 외국인센터 찾았는데, 찾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3월이나 2월에 들어왔는데 5월에 여기 외국인센터 생겼어요. 대구에는 엄청 많아요. 외국인센터나 복지센터. (중략) 전북 좋은 점은... 흠... 별로 (없어요.) (중략) 제가 들었는데 경북 영천 있거든요?! 거기 F-2-R (사업) 지역인데, 근데 거기 분들은 F-2-R (비자) 받았을 때 자기가 월세를 살고 있을 때는 지원해 줬어요.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나 20kg 쌀이나 이런 거 챙겨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전북은 그런 거 없어요. 시청에 우리 가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A3)

“경기도 안산 쪽은 기술 뭐 배우려면 편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저쪽은.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경기도는) 지게차 자격증 따려고 해도, 또 다른 기술 배우려면, 다른 바리스타 이런 것도 있고 하나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정읍)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데... (중략)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정읍에 계속 살 것 같은데,) 내가 기술 뭐 배울 수 있으면 좋고, 회사 안 좋아서 아니고, 내가 더 좋은 거 잘하는 거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더 기술을 배우고 나한테 맞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4)

- 이러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전북지역으로의 이주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우수인재(F-2-R) 유입 확대 및 장기 체류를 촉진함으로써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다. 구직 과정과 일자리 경험

### 1) 비공식적 취업 경로와 한계

- (행정사 매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외국인인 대부분 행정사(브로커)를 매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실제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희망자가 기업에 직접 연락하여 구직 의사를 표하고 일자리 정보를 문의하는 등 구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행정사 중심의 취업 연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구직·이직 방법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된 실정임
- 이 같은 전북지역의 행정사 의존 구조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행정사 이용비용 부담을 전가하여 이들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의 전환을 통해 전북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거 여기 구할 때는 행정사 (이용해서) 왔어요, 소개비 주고. (중략) 일자리 구할 때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서 행정사 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아서 사람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변경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그 비자에 살기를 원하기도 하고...” (A2)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저기 행정사로 가라’ 이래요. 불안해요. 어차피 그분이 (행정사) 따로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서류도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회사도 회사 서류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개비 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분이(행정사)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해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회사 소개해 주는 것 때문에... 3개까지만 소개해 주면, 우리가 그중에 선택하면서 하나로 가야 돼요. (중략) 우리 직접 소통도 이 정도 하나까 그냥 전화하면서 면접 날짜 잡아서 가서 면접 보고 일(업무 현장) 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류도 다 준비하면 되는데, 그냥 회사에서도 복잡하니까 그냥 행정사로 가라고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세 군데에 (직접) 전화했었어요. 근데 복잡해요.” (A1)

“행정사는 회사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하고, 면접일 같은 거 같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소개비가 좀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래 대구에 살았는데, 정읍에 어디 회사 있는지, 어디 사람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략) 행정사에 돈 안 주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략) 제가 처음 F-2-R (비자로) 바꿨을 때는 행정사가 소개해 줬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 옮겼을 때는 혼자 알아서, 혼자 워크넷에서 찾아서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그냥 ‘월요일에 면접 보러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냥 가서 면접 보고 거기 일하게 됐어요.” (A3)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하면 돼요. 직접 할 수 있는데도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냥 행정사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형님들이 행정사 준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안 해도 돼요.’(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서류 다 만들어주니까 행정사 안 써도 된다고...” (A4)

- (학교 관계자 소개) 일부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는 유학 기간 중 교수의 소개를 통해 회사를 알게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졸업 이후 동일 기업에 정식 채용되는 경로로 일자리를 확보함

“교수님들이 (아르바이트 자리) 알려주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취직 하려고 부안 쪽으로 옮겼어요.” (A5)

- 그러나 면접 참여자(인사 담당자)는 현장의 전반적 추이를 보면, 신규 인력이 ‘유학·구직(D-2/D-10) → 지역우수인재(F-2-R)’ 경로를 통해 진입하는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기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가 ‘지역우수인재(F-2-R) → 구직(D-10) → 지역우수인재(F-2-R)’ 경로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형 구인·구직 매칭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체류 외국인(유학생·구직자 등)에게 전북지역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2) 일자리 만족 요인

- (선호 근로 조건) 전북자치도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희망자는 구직(면접) 과정에서 근로 조건을 안내받고 본인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 시간(주 52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 조건·근무 환경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주거 임대료(월세) 일부 지원, 자격증 보유 지원, 다국어 안내판 설치, 구내식당 메뉴 배려 등 외국인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이처럼 지역우수인재(F-2-R) 유형 외국인이 선호할 만한 근로 조건과 외국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경우, 이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 기반의 장기 체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처음 면접 볼 때 야간(근무)하는지 주간(근무)하는지 선택하라고 해서 그때 주간(근무)으로 계약했고, 주야간(근무)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주야간(근무)으로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A2)

“저는 여기 오기 전에 3개, 4개 회사 인터뷰 보러 갔는데, 저는 그냥 주간(근무)만 하고 싶어서 여기가 주간(근무)만 할 수 있고, (근무 외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일도 약간 적고 하니까 괜찮아요. (중략) 주간(근무)만 하면서 이 정도 임금 받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해요.” (A1)

“여기 주간(근무)만 해요. 수당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월급은) 좀 예, 괜찮습니다. (중략) 동료, 친구들이 좋고, 사무실에서도 도와주고... 어떤 비자 비꿀 때 이런 거 할 때 다 도와줘요. 내가 다 알아보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니까요. 지금 (내필인 근로자) 7명 있는데, 다 3년 넘게 일한... 나는 6년 정도 됐는데, 7년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은 나간 적이 별로 없고... (중략) 나는 지금 지게차 면허증 따고 상하차하고 관리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면허 따면 우리 매달 지원금을 받는데, 따기 전에는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땀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지원받아요. 계속 따라고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 (자격증) 따면 5만 원 씩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A4)

“저는 사실 다른 데도 (일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여기는 가족같이 느껴요. 여기 좀 따뜻하게 대해 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급여가 높은 것도 너무 좋아요. (중략) 미안하는 없긴 한데, 뭐 못 먹는 나라꺼 점심 따로 해주는 거 있긴 한데, 뭐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A5)

## 라. 동반가족 적응·정착 현황과 과제

### 1) 배우자 구직·취업 현황과 지원 필요성

- (배우자 취업 현황 및 애로사항)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의 배우자(F-3-1R)는 취업이 허용되는 만큼, 실제로 A2와 A4의 배우자는 각각 식품가공업과 제조업 분야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여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지역우수인재 배우자(F-3-1R)는 입국 초기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구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와이프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같이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6개월 정도는 여기 정업에 다른 데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일이 생겨서 바꿨어요(이직했어요). (구직 과정이)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어 못하고 하니깐 언어 문제도 있고... (중략) 대부분 남자와 여자들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회사에 그래도 조그만 거(소규모 사료·비료 포장 업무) 생겨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A4)

- (배우자 취업 지원 필요성)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희망자 대부분이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층으로, 현재는 영유아 양육으로 인해 구직하지 않더라도 향후 자녀 성장에 따라 배우자의 구직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배우자 구직활동 지원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일부 문화권 외국인에게는 배우자의 취업 허용이 매력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등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취업하기보다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해당 문화권의 지역우수인재 배우자(F-3-1R)에게는 취업 지원보다 한국어교육 등 지역사회 초기 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더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지금 와이프하고 같이 있고, 아기도 한 6개월 됐어요. 여기 한국에서 낳았어요. (중략) 와이프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일 안 구했어요.” (A1)

### 2) 동반가족 지역사회 적응·정착 어려움과 지원 필요

-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기회 부족) 미혼인 A5를 제외한 모든 면접 참여자는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동반가족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수가 적고 기관당 제공 프로그램도 부족하며, 거주지와 접근성이 낮아 실제 수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온라인 수강·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등 보다 탄력적인 방식으로 이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충, 수요 기반의 교육 공급 확대,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 등 이수 환경 개선을 통해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도와야 함

“와이프는 그냥 집에서 저하고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또)* 인터넷 유튜브 보고, 드라마도 보고요. 이렇게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고, 0단계에 받았는데 또 임신 때문에 좀 수업받기도 좀 어려워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중략)* 지금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신청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김제에서는 우리 와이프는 F-3-1R 비자라 여기서 수업 안 된대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기서 수업 받았었는데 언제부터는 F-3-1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업이 안 된다고 해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우리 부부는 아기 있으니까, 와이프가 거기 까지 가는 것도 일이에요.” (A1)

“와이프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2달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임신 중이라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해요. *(중략)* *(정읍시가족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할 수 있긴 한데)* 계속 같은 단계 안 해요. 어떤 때는 3단계, 어떤 때는 4단계, 어떤 때는 1단계, 2단계 그렇게 해요. 정읍 쪽에서 좀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지금 정읍 쪽에 수업이 없어서 완주 가서 수업 들어가야 해요. 원래는 임실 가서 수업 들었어요. 신청자 너무 많아서 수업받기 힘들어요.” (A3)

“*(와이프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평일에, *(그래서)* 그때는 안 배우고, 지금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일요일마다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지금은 익산에서 해요. 여기 *(정읍)*는 평일에만 있으니까 1단계 공부할 때는 왔다 갔다를 군산까지 했고, 지금은 익산으로 접수한 거예요. *(수강 신청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접수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익산으로... 군산 갈 때는 같이 갔다가 같이 왔는데, 군산은 시간이 안 맞아요. 버스가 바로도 없고, 그리고 저기 군산가족센터가 터미널에서 좀 멀리 있어요. 너무 멀어요. 지금 익산은 역으로 데려다줘요. 그냥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해요.” (A4)

- (미성년자녀의 학교적응 지원 필요)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자국과는 다른 지역사회 환경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가족 단위 정주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살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네팔 보냈어요. 아이가 네팔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했나요?)* 네, 네.” (A2)

## 마. 정주 여건 개선 과제

### 1) 주거 관련 고충과 지원 수요

- (비공식적 주거 확보 경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 상당수는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원룸·빌라 등 민간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음.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월세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지인·친구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취함으로써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 어려웠어요. 원래 그냥 방만 찾으려 저 목포에서 여기 올라오고 그날은 제가 아마 인터넷 찾아서 20개 이상 부동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해 봤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목포에 내려가서 다음 날 제가 또 한 번 전화했더니 방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금방 전철 타고 와서 보고... 근데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런 선택이(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하고 했어요.” (A1)

“처음에 부동산에 갔는데요, 근데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면, 소개비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을 얻었는지. (중략) 친구 사는 집의 사장님 집에 저도 (살고 있어요.)” (A3)

- (주거임대료 부담) 이들은 소득 대비 높은 월세 수준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임대료 부담은 가족 단위 정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실제로 A3의 경우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동반가족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공공 차원에서 주거 탐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지 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향후 정책 설계 시 가족 단위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한 공공 가족형 기숙사 등 가족형 주거지원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회사 기숙사는) 남자만 살 수 있는데 내가 따로 (가족 기숙사도) 만들어달라고...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언제 만들어 주는지는 모르겠고... (웃음). (중략) E-9으로 있을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F-2-R로 바뀌어서 가족 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요.” (A4)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게 있으면 좋죠. 회사 숙소(기숙사)는 있어도 부부라고 안 되고 그러니까... (중략) 다른 사람들(외국인 근로자)도 부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제일 싼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어요, 관리비하고. 제일 싼 건데 그래도 5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그래서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A1)

“좀 부담이 돼요. 집값이 50만 원 나가잖아요. 회사에 기숙사 있는데 근데 와이프 데려오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그거 자기 집 계약서 내야 돼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그런 거 있어야 해요. (중략) 집값이 비싸서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랑 애기가 고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 아빠는 지금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 1명이랑 같이 2명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얼마 있다가 애기 낳으면 저도 1년 있다가 와이프 고향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여기 비싸잖아요, 다. 특히 집값은, 월세는 비싸요. (가고 나면) 회사에 다시 말하면 기숙사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되면.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면 돈 좀 아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월세 들어가는 돈 그때 (기숙사에 살면) 제가 혼자 생활비로 남아요.” (A3)

## 2) 교통·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 (미흡한 교통·편의시설 인프라) 아시아마트 등 외국인 친화적 상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료품 구매나 기본 의료시설 이용과 관련된 불편은 크게 없어 보임. 하지만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은 전반적인 체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교통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통도 안 편하고, (수도권은) 편의시설도 다 있고 그런 거 비교하면 여기가 살기 힘들어요.” (A1)

“제가 불편할 때는(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한 건) 대구에는 기차나 지하철이나 다 있어요. 근데 정읍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 좀 그래요.” (A3)

“차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편하게 놀고 있는데, 차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때 나도 E-9으로 있을 때 차 없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몰라요. 어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나가보면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어디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차 있으면 더 편하게 놀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는 차 없는 친구들에게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요. 시간 안 맞거든요.” (A4)

-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접근성)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희망자 본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기회가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거주지 및 직장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거점 지역에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학습(한국어·사회통합) 병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비자 요건 충족 및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연장을 통한 장기 체류를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축된 온라인 학습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와 동시에 야간·주말 과정 개설, 프로그램 단계별 상시 운영, 과정 증원·증편 등을 통해 수강 편의성을 높이고, 시군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교육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지금 그거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못 해요, 사람들이. 신청 못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공부했어요, 온라인으로. 나는 수업 간 적이, 직접 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30시간짜리 귀화용(심화 과정) 있잖아요?! 그거만 갔는데, 4단계하고 5단계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중략) 오프라인은 효과적이죠, 공부할 때. 온라인은 그냥 들으면서 따라 잘 안 했어요, 못 물어보고, 다 시간도 부족한 것 같은데. 직접 가면은 마음이 편한데, 물어보기. 그리고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그런데 여기 정읍에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 저기 5단계는 토요일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다(른 단계)는 없어요. 1단계, 2단계 다 없으니까 군산 아니면 김제... 김제도 2단계까지, 3단계까지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익산 가야 되니까.” (A4)

“처음에 경상남도에 있을 때 회사가 너무 바빠서... 처음에 (한국) 들어올 때 한국말 잘 못해서 어떤 일을 시키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회사가 너무 바빴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저는 부탁했는데, ‘저는 한국어를 좀 배운다고(배워야 하나) 일요일에 좀 시간 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겨주지 역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대구로 옮긴 거예요. 대구에 와서 우리 회사 옆에 있었어요, 그 복지관. 거기서 한국어 배웠다가 거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까지 합격했고, 여기 F-2-R 비자로 오게 된 거예요. (중략) (외국인 입장에서) 가까이 배울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 그렇게 (한국어 배우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방글라데시) 친구들은 우리나라랑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돈 내고 한국어를 배우도록 가르쳐요.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은)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돈 주고, 온라인으로. 한국인 선생님한테 말고 우리나라(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한국어를 잘하는 (방글라데시) 사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중략) 사회통합프로그램 그런 거 온라인으로 있으면 다들 신청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여기 정읍에 사는 친구가 수업 신청을 못해서 남원으로 수업했거든요?! 근데 한 번 가더니 ‘아, 멀어.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김제나 익산이나 정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배웠을 때는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때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어요.” (A3)

## 바. 지역사회·직장 내 사회관계

### 1) 비공식적 커뮤니티 의존

- (국적별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의지) 일반적으로 한국 및 전북지역 체류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은 동일 국적 출신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받고 있음. SNS를 통해 비자·체류 관련 정보나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자들과는 직접 만나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네팔 커뮤니티가 김제에) 원래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엄청 얘기 잘합니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중략) 우리 네팔 명절 있잖아요. 그때는 다 모여서 우리 행사하고, 여기 축구장 있으면 거기서도 주말마다 배구하고 축구하고요.” (A2)

“제가 여러 번 도움을 받았어요. 저 여기 회사 있을 때 와이프가 뭐 갑자기 아프거나 뭐 할 때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도와주고... 우리는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맛있는 거 요리하면 그냥 나눠서 먹어요. 그런 거까지 해요. 그래서 도움이 진짜 돼요.” (A4)

“SNS로 우리 김제 것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 다 있는 네팔 사람 중에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다음 9월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올리고 우리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A1)

- 한편, 이들은 문화적 이해도를 갖춘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연결망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연락할 게 없다’라고 언급함. 이는 외국인지원센터·가족센터 등 지역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내국인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지난주에 우리 네팔 큰 명절 다사인(Dashain, 추석과 같은 네팔 최대 가을 명절)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정음가족센터 선생님도 오고 여기 (정음)시도 왔었어요. 그때는 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 하라고 그러니까 편해요. (고충을 이야기해 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좀 편했어요. 문제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중략) (외국인지원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있는데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직은 필요 없어요.” (A4)

## 2) 갈등·차별 인식

- (제한적인 갈등·차별 경험) 전북지역에서 근무·체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갈등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과장 직급까지 승진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 지역의 외국인 수용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회사 복지를 적용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는 있어 보임. 임금·승진 기회 등에서의 차별을 지속적으로 점점 개선하고,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을 적절히 중재해야 함
  - 한편 인사 담당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승진시키려 해도 본인이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등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도 함

“저 다쳤어요. 작년엔 여기 손가락 여기서 파이프 안에 꺾어요. 꺾다가 여기 *(뼈가)* 깨졌어요. 그때는 저도 4개월 정도 쉬었어요. 근데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안 해줬어요. 우리 고용보험 냈는데, 냈는데도 안 해줬어요. ‘우리 회사에 사고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산재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 네가 수술을 안 받았으니까 산재 안 해 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줬어요. 수술은 안 된대요. 이거 너무 작은, 작은 뼈라서. 기본급은 줬어요. 기본급이랑 의료비랑 그런 거 줬어요. 근데 산재는 안 해 줬어요.” (A3)

“한국 회사 안 좋은 건 좀 같은 일 해도 외국인이랑 내국인은 좀 달라요, 월급이. 그거는 다른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랑 비교하면 *(지금 월급 수준이)* 괜찮은데?! *(한국인들이랑)* 많이 차이 나요. 제가 봤을 때 *(주간 근무만 하는)* 한국 분들은 우리 야간*(근무)*하면서 받는 것보다도 더 받는 것 같은데... *(중략)* 승진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외국인은 *(승진한 사람)* 없어요. 그거 단점이예요, 우리 회사. 한국인 오면은 바로 1년, 2년 있다가 주임, 대리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없어요.” (A4)

### 3. 기업 인사 담당자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요구

#### 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긍정적 효과

- (인력난 완화) 기업의 관점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제도 도입 및 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실제로 전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김제 소재 A기업이 18.9%, 정읍 소재 B기업이 33.3%, 정읍 소재 C기업이 22.5%, 부안 소재 D기업이 10.0%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가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임. 이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수급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F-2-R (비자 제도) 없을 때는 내국인을 최대한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외국인도 (채용) 안 되니까 이제 저희는 그... 알바들(을 활용했었어요.) (중략) 외국인은 처음부터 저희가 채용을 했었죠. 이게 좀 제약이 있는 게 부안군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젊은 층이 없고 거의 노령층이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국인도 구하기가 힘들고 외국인마저도 이제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F-2-R 비자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사업에 참여를 한 거죠. (중략) (외국인 채용) 만족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일을 잘하는 애들은 기술직으로 올리는 거죠. (내국인들은) 제가 올해 생산직을 100명 정도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는데, 10명 중에 한 8명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외국인들은 (이직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이 친구들은 2년 동안... 1년은 무조건 그 해당 기업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1년 넘으면 대부분 오래 다니거든요. 적응을 하니까요.” (B2)

“현재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도 이제 뭐 간담회나 뭐 회의들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다 늘었어요. 내국인이 없어요. F-2-R (비자 제도) 생긴 게 구인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비자마저 없었으면 실제로 인원 구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역에 한정되고 이 친구들(지역우수인재 유형 외국인) 좀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런 거주지 제한을 알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중략) E-9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주지가 저희가 인원이 한정적이라 그거는 좀 힘들어서 F-2-R을 선호를... (중략) 저희가 봤을 때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50% 이상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자들 봤을 때 그것(지역특화형 비자)마저 없었으면 솔직히 공장을 못 돌릴 정도의 사유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지역특화형 비자) 때문에 많이들 좀 (인력난) 해소를 많이 했죠, 주변에도 보면.” (B1)

- 특히 광역자치단체 연간 생활임금 기준 적용 등 일부 요건 완화와 일정 기간 거주지 제한 요건이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구인O) 수월해졌죠. 예, 수월해졌죠. 그거(소득 요건)를 맞추기가 실제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변동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수월해졌죠. (중략) 그동안 5년 동안 여기에 있었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쪽에다 기반을 잡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F-2-R 같은 경우는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벌써 다 거기다 터를 잡고 대부분 배우자 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쉽게 옮기는 게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기반을 잡으면 쉽게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 정도 유예기간이면 충분히 그 친구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B1)

## 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

###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 교육 제공·요건 개선

#### ■ 현장 실무자 대상 비자 제도 홍보·교육 필요

- (현장 실무자 대상 비자 제도 홍보·교육 부재) 기업 인사 담당자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홍보·교육이 부재하여 제도 운용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체계적인 운용이 어려우며,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체계적 홍보·교육 프로그램 마련, 상담 창구 운영,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비자와 관련된) 교육은 안 받고 지침 나오면 이제 지침 저도 읽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담당자 분하고 통화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고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고... 올해에도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반기에 신청했을 때는 평균 임금의 70% 해서 한 3,800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출입국관리사무소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혹시 양식이 있냐' 그랬더니 뭐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일자리센터에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침이 바뀐 게. 그럼 저는 또 그거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중략) (F-2-R 비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저는 공지를 처음에 못 받았었고 출퇴근하는 길에 플랜카드 보고...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쪽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알아봤을 때, 처음에는 단순 생산직은 안 되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그래도 계속 알아봐서 어떻게든 저거 해와라.' 그래서 이제 부안군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일단 한번 서류라도 내보자고 해서 서류를 냈더니 운 좋게 이제 생산직까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희는.” (B2)

■ 지역우수인재(F-2-R) 인력 확보 제약 요인 및 개선점

- (직전 체류자격 요건 강화 문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직전 체류자격이 유학·구직(D-2, D-10), 특정활동(E-7)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 당시와 달리 다양한 체류자격에서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한 인력을 확보할 기회가 크게 축소됨. 즉, 직전 체류자격 요건 강화가 실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신설되면서 비전문취업(E-9) 인력이 해당 자격으로 전환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졌으므로 기업은 이론적으로는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외국인을 모두 채용하여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체류 안정성·장기근속 가능성·한국어 소통 능력 등이 보다 우수한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의 외국인 고용이 인력난 해소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제한 문제) 내국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가능 최대인원을 산정하고,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관련 현실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됨. 전북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채용 자체가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 내국인 고용 규모가 실제 필요 인력보다 적게 형성되는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결정하다 보니 기업이 필요한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작년에는 저희가 못 하고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어서 한 기업당 인원 제한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한 기업당 50명까지, 최대 50명까지 그게 풀리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추가 채용을 10명을 하고 있는 거고... (중략)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죠, 지금 사실. 네. 제가 대학교에 다 전화를 돌려봐도 대상자가 마땅히 없다고만 하니까. 사실 취업박람회를 가도 그렇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행정사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이 E-9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E-9 비자도 된다고 이제 잘못 알고 계셔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중략) 졸업자들은 저희가 보면 미안마가 지금 현재 분쟁국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한국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난민 비자를 받고 있어요, 지금. G-1(7/E) 비자. 원래는 처음에는 난민 비자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난민 비자가 또 안돼버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사업을 50명까지 늘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명 정도를 저희가 찾았는데 다 난민 비자예요, 전부다. (중략) 그리고 50명까지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내국인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 지역적인 특징이 부안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F-2-R(비자 제도)을 시행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막아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는 ‘150명까지는 해주라’라고...” (B2)

- (휴직자 고용인원 포함 문제) 외국인 고용인원 제한 문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 공백 인원도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하는 문제로 이어짐. 지역 우수인재(F-2-R) 외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행정상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여 실제로는 한부모가 아님에도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 되는 사례가 발생함. 해당 인력은 휴직 중에도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되어 기업이 실제 업무에 배정할 인력을 충원할 수 없으며, 이는 일부 기업에서 여성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휴직자를 현재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대체 인력 활용을 가능케 하고, 실제 가족구성 형태를 반영하여 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등 행정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됨

“저희 쪽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베트남 애들이 5명이 있는데 4명이 지금 출산 휴가예요. 작년에 들어와서 바로 출산휴가를 써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인원으로 잡혀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은 못 하는데. 우리나라 호적상으로는 남편이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정으로 봐버리니까 출산휴가도 1년 6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육아휴직을 1년을 들어가야 하는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더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출산휴가까지 하면은 거의 1년 '9개월, 2년 동안을 (일을) 못 하는 거죠. F-2-R 비자로 바뀌서 한 6개월, 7개월 일하고 갑자기 출산을 한다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4번이나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남자를 좀 뽑아줘라. 여자분들 뽑았더니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 (B2)

- (일률적 요건 적용 문제) 출신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요건 적용도 현장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미얀마의 경우 분쟁 상황으로 인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매우 어려우나, 해당 서류 없이는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하여 취업 연계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체류했거나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일부 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원래 최초 초창기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면 필요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해외범죄경력증명서). 5년 미만지만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분쟁 국가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이걸 떼가지고 보내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뭐 친구들한테 부탁,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본인 외에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때문에 못 하는 친구들이 한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취소를, 추천서를 아예 취소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무슨 범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과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서류긴 한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해당 나라에서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좀 곤란한 거죠.” (B2)

- (비자 발급 절차·기간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통 문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갱신 과정에서 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연계 체계가 부재하고,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없어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지역우수인재(F-2-R)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전북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전용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비자 발급 관련 행정편의를 제고한다면 전북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비자가 나오는 기간은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게 애로사항이네요. 보통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을 거의 꽉 채우거나 아니면 25일 정도는 늘 그 정도는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 말로는 뭐 추천서를 제외하고도 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약 잡는 거, 비자 변경되는 시간들까지 포함했을 때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게... 즉각적으로 현장들에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중략) 행정 기간만 좀 줄어든다면 실제 현장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야 효과들이 발행하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켜줘야 이 제품 생산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냥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뭐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뭐 뭔가를 이게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기다려서 올 때까지 그냥 ‘어서 오세요’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B1)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통화도 되게 힘들어요. 통화 자체가 그 전국 콜센터 전국 번호로 그쪽에 연결이 돼서 전화가 가면은 거의 2~30분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해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뭐 ‘이런 일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기다려야 해요. 연결하다가 또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여서 물어보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외국인 근로자)이 갔을 때 안내를 받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강압적이예요,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굉장히 막 외국인들한테 억박지르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뭐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은 당연히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가 눌려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도 전화 통화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전담반처럼 담당자라도 한 명 있어가지고 직행번호도 있으면은 기업들이 출입국사무소로 손쉽게 일하고, 서류도 주고받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B2)

#### ■ 기타 비자 요건 관련 기업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국적 비율 제한 요건 관련 개선·지원방안) 특정 국적 비율이 지자체 쿼터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요건에 따라 기업은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국적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인사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소

규모·영세 기업의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비자 제도 및 외국인 인력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가 매우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국적 비율 요건을 기존과 같이 40~50%로 다시 완화하거나, 기업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각 공정마다 자기네들이 이제 같이 외국인들하고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네팔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세 국가가 있는데 공정마다 어디는 뭐 ‘베트남 친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뭐 ‘네팔 직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 취향에 좀 맞게 이렇게 좀... 조·반장 스타일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좀 국적은 좀 달리해서 행정사한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원할 수 있도록... (중략) (나라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건) 좀 부담스럽죠. 제가 캄보디아를 안 늘리고 싶은 이유는 솔직히 그거였어요. 제가 안전이나 보건이나 이런 다른 업무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네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이 늘잖아요. 그 언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아 뭐 제가 번역을 뭐 다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개네들 언어로 교육도 해야 되고, 뭐 표지도 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싫어요.” (B1)

- (한국어 능력 요건 관련 개선·지원방안) 토픽 소지 자체는 채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원칙적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토픽 급수와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다수 제기됨. 즉, 토픽 급수가 높아도 실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토픽 급수는 낮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매우 우수한 외국인도 있음
- 한국어 능력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기보다는 토픽은 일정 수준(예, 3급)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북형 맞춤형 실무·비즈니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토픽 4급과 2급 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져요. 현장 내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조·반장들하고 같은 조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한국어를 얼마나 그래도 관심 있게 해서 자기가 좀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지, 그냥 절대적인 지표들 그 능력들 평가 점수를 가지고 개네들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B1)

## 2) 일자리 :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 (공공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한 행정사 과의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공공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의 기본 정보·구직 및 고용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행정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또한 기업이 비자 전환·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동행하여 비자 변경 절차를 지원할 인력이 없어 행정사 이용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임

-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이러한 행정사 과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 체계화와 더불어, 소규모·영세 기업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구인·채용·관리 업무 보조 인력 지원, 기업-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기업과 비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잠재적 지역 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인력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여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행정사가 없더라도 F-2-R (비자 제도 운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기관에서도 F-2-R의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많지 않아요. 개네들(행정사)이 가지고 있는 DB보다 이 (일자리)센터에서 갖고 있는 DB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를 못 맞추는 거죠. 담당자들이 행정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간혹 가다 한국어를 잘하거나 이제 이런 한국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은 고용24를 통해서도 지원을 해요, F-2-R도. 그리고 F-2-R 애들은 적극적으로 또 구직활동을 해서 찾아도 와요. 그리고 대표전화로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있잖아요?! 이게 서류는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나머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변경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은 그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하면 또 훌쩍 하루가 가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가 그 업무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업무들도 지금 많은데 그 업무를 하면서 까지는 솔직히 못 하기 때문에 행정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중략) 시나 도나 DB들이 없잖아요. 인원의 분포나 도내에 있는 인원들의 그런 것들(구직자 리스트)도 없어서 그것도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실제 필요한 시기에 뭔가 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 내역을 좀 알고 싶죠. 그래야 저희도 인원을 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것도 있어서요. (중략) D-10 애들이 얼마나 있어서, 대학교에 얼마나 DB에 애들이 있어서, 아니면 뭐 대부분 대학교 애들일 텐데, 대학교 졸업하거나 교환학생 온 애들일 텐데, 그 친구들에 대한 내역들이 전혀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뭐 회사 설명을, 회사 소개를 해서 ‘이런 회사가 있으니, 너네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는 것들에 대한 기회가 없어요.” (B1)

“아무래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인력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B2)

- (지역 대학 협업 기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북지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도내 인구감소지역 기업으로 원활하게 취업·정착하는 경로가 구축·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됨. 이는 지역 대학 유학생·졸업생(D-2, D-10)의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율을 높여 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기관의 구직활동 지원) 아울러 전북 인구감소지역에는 외국인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 기관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희망자의 인구감소지역 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계적 기반을 마련·강화해야 함

“인턴들 방학 기간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체험 활동 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채용하고 연계가 되냐고요. 그냥 그때 당시 학점 받는 거,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차라리 학점을 인정 해 주면 2학기 때부터 해서 취업 활동 그러니까 채용을 해버리면 그 학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게 낫지. (중략) 도 내나 시 내에서 좀 구직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기회와 장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좀 있어서 직접 개네들이 발로 운전해서 와요. 가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비자가 뭐 F-2-R인데 구직을 하고 있다. 혹시 일자리가 있냐?’ 2~3명씩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구직 중인 지역우수인재 비자 취득 외국인에게 도움 주는 곳)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 보니 자기네들 스스로 업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역센터에서 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B1)

### 3) 동반가족·정주 여건 : 주거 및 동반가족 적응·정착 지원

- (주거 지원 및 동반가족 지역사회 적응·정착 프로그램 마련 필요) 동반가족 및 정주 여건과 관련하여서는 주거 지원과 동반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정착 프로그램 마련이 강조됨.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계약, 차량 구매·등록, 은행 업무 등 일상적 행정 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공공 차원의 행정·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주거·차량 등 생활 필수 자원에 대한 계약 연계 시스템 구축,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용자·보조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안됨. 또한 외국인 친화 정책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의 동반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북 실정에 맞게 적용·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됨

“F-2-R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직접 얻을 때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개네들 (F-2-R 외국인 근로자) (부동산) 계약서 다 봐주고 싶은데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 그런 행정 절차들. 그러니까 재네들이 집을 얻는 거 그다음에 애네들이 뭐 임대료들이 처음에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임대료를 조금 뭐 저리로 해주는 뭐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을 위한 뭐 그런 사업들이나. (중략) 거기(인산씨)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어쨌든 전북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많지 않으니 그게 좀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중략)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차량 계약을 하거나, 이제 어쨌든 돈이 오가는, 큰 목돈이 오가는 거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애네들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도 중개업자를 끼기 때문에 좀 나은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기당하고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조금 중간에서 알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절차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다고 그러면 애네들한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한국인도 용자해 주잖아요. 애네들도 어쨌든 보험금이랑 내거든요. F-2-R 같은 경우는 4대보험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개네들도 좀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어쨌든 F-2-R 중에 일부 애들은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스템들이 구비가 좀 돼야 정말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B1)

#### 4) 사회관계 : 내-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 예방 및 중재 지원

- (갈등 예방·중재 지원책 마련 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친화적 운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역차별을 제기하거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조정·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 예방·중재 사례를 공유하거나, 지역 노무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갈등 중재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내국인들하고 저희가 차별을 그렇게 많이 두진 않아요, 임금 차이에서도, 상여도. 그런데 조금 손을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좀 많아요. 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졌을 때 내국인들이 외국인보다 높은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제 비용(임금)들이 그렇게 차이들이 안 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좀 불만들이 좀 있어서” (B1)





# 제 5장

## 제도 개선 및 정책제언

1. 정착·정주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
2. 제도 운용 개선 및 중앙부처 대응 전략
3. 정책적 활용방안 및 후속과제 제언



## V. 제도 개선 및 정책제언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 외국인·기업의 인사 담당자·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과 중앙부처 협의 과제를 제안함

[표 5-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구분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및 중앙부처 협의 과제
	지역우수인재 (F-2-R) 외국인	기업 인사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전담 기관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배우자의 취업을 위해서는 행정사(브로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비용이 부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의 전용 소통 창구가 없어서 비자 전환·갱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즉시 구인이 어려움</li> <li>•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행정사를 통할 수밖에 없음</li> <li>•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서 잠재적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다하므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li> <li>•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서 지속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형 외국인 정보·상담·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li> <li>▶ 기 사업(원광대)과의 연계</li> <li>▶ 전북형 외국인 통합 지원 전담 기관 지정 및 조직·인력 체계 정비</li> <li>▶ 통합 데이터 구축</li> <li>▶ 성과지표 고도화</li> </ul>
지역 (시군) 간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기회가 시군마다 다름</li> <li>• 다른 지자체는 정착 지원금이 많거나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전북지역은 없어서 비교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업무 담당 부서가 다르고 조직·지원의 편차가 커 취약지역으로 외국인을 연계하기가 힘들</li> <li>• 일자리 많은 곳이나 대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외국인의 체류 선호도가 달라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도-시군 정착지원 표준패키지 마련</li> <li>▶ 취약지역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표준화</li> <li>▶ 실적 관리를 통한 지속성 확보</li> </ul>
정주 유도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임대료가 부담되어 가족형 주거 시설을 희망함</li> <li>• 보육료 지원 등 자녀 관련 지원이 필요함</li> <li>•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불편함</li> <li>• 외국인지원센터가 부족함</li> <li>• 자기계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지원과 동반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정착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필요해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주거·생활·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li>• 타 지자체 대비 매력적인 동반가족 정착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통역·동행 지원 강화</li> <li>▶ 생활권 기반 공동기숙사·생활거점 모델 도입</li> <li>▶ 현금성·바우처형 주거 지원</li> <li>▶ 가족형 주거 모델 도입</li> <li>▶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li> </ul>

구분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및 중앙부처 협의 과제
	지역우수인재 (F-2-R) 외국인	기업 인사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비자 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기회가 부족(교육 기관 수가 적고, 기관당 제공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거주지와 접근성이 낮음)하여 이수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픽 급수와 비즈니스 한국어 수준이 실질적으로 매칭되지 않는</li> <li>직전 체류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제한, 휴직자 고용인원 포함 등 비자 요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제약이 가해짐</li> <li>국적 비율 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인사관리 난이도가 너무 높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요와 공급 맞지 않아 이수율이 떨어짐</li> <li>비전문취업 대상 제외, 출신국 비율 및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등의 비자 요건 강화가 외국인 인력 유입·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관·프로그램 확충</li> <li>찾아가는 한국어·사회통합 교육모델 도입</li> <li>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특화 사회통합 교육과정 신설</li> <li>교육프로그램 이수 관련 외국인 재정 지원·기업 인센티브 지원</li> <li>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제도 개선 중앙부처 건의</li> <li>사업장 변경·추가 취업 지침의 유연화와 권익 보호</li> <li>인구감소지역 현상을 반영한 비자 요건 탄력적 운용 중앙부처 건의</li> <li>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와 재원 안정화</li> </ul>
지원· 관리 대상 : 외국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정보 취득의 주 경로라서 정보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li> <li>국외 및 도외 지역에 체류 시 전북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관해서 알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실무자 대상 비자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이 없어서 스스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대상 교육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비자 제도나 외국인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움</li> <li>외국인 유학생 대상 홍보가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대상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홍보</li> <li>사업체 대상 비자 제도 홍보·교육·상담 시행</li> </ul>
내· 외국인 사회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국적자와의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국인과 관계 형성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친화적 운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역차별을 제기하거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중재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시설 기반 지역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공</li> <li>지역 주민 대상 외국인 수용성 제고 및 지역사회 상호이해 도모</li> </ul>

- 도출된 개선 방안 및 중앙부처 협의 과제는 ‘정착·정주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과 ‘제도 운용 개선 및 중앙부처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1. 정착·정주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

### 가. 한국어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내실화

#### 1) 문제 인식

-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 본인은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해 함께 온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임
-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기관)마다 개설되는 과정이 한정적이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희망 외국인과 그 가족이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을 신청·이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특히 전북은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이 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지역에 다수 체류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는 일반 운영기관 1~2개가 운영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부합하지 않는 실정임

[표 5-2] 전북자치도 2025~202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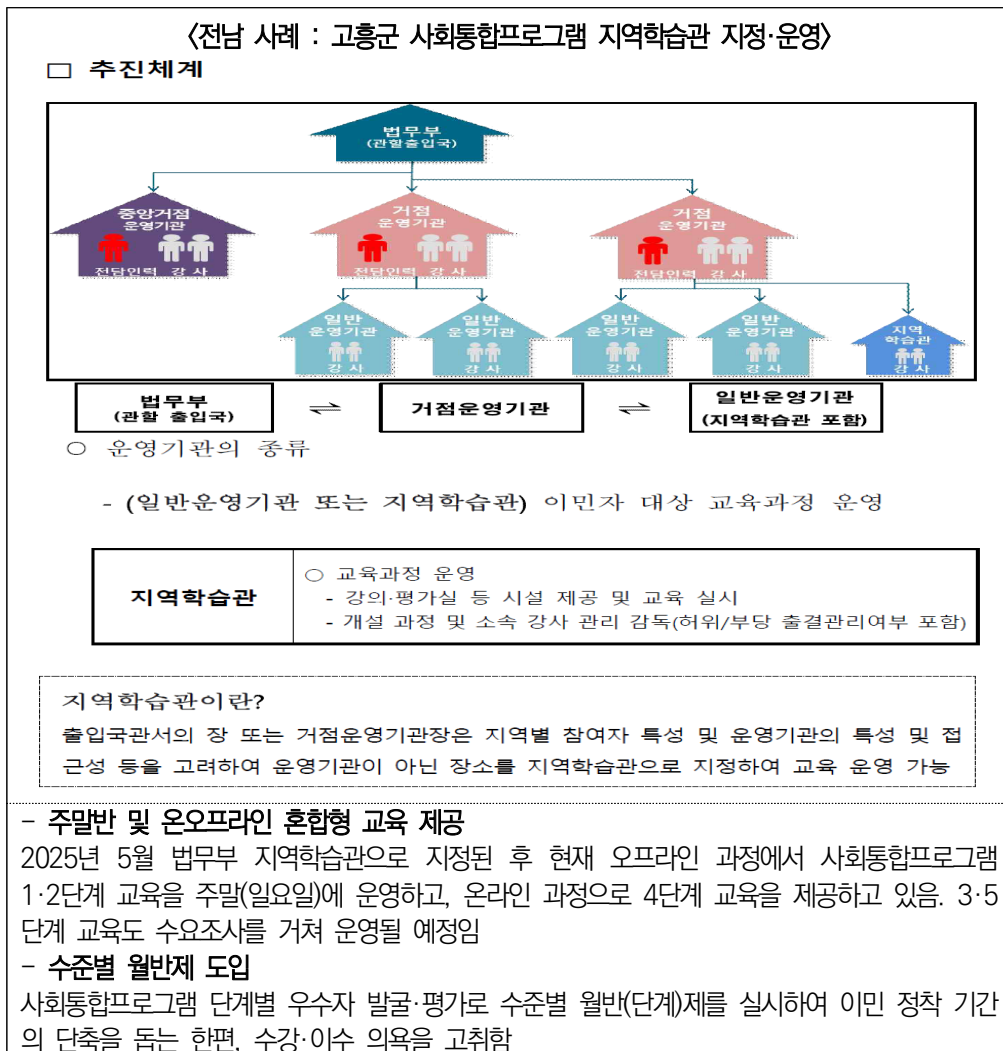
구분	지역	운영기관명
거점 2개	완주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익산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 19개	전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물댄동산
	완주	완주군가족센터
	임실	임실군청(임실군가족센터)
	장수	장수군가족센터
	남원	남원시가족센터
	진안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진안군가족센터
	군산	국립군산대학교, 군산시가족센터, 군산시청, 군산온누리M센터
	부안	부안군청(부안군가족센터)
	정읍	정읍시가족센터, 전북과학대학교
	김제	김제시가족센터
	고창	고창군가족센터
	순창	순창군가족센터
	익산	익산시가족센터

자료 : 법무부, 2024, 2025년도~202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

## 2) 운영 방식 개선

### ■ 교육기관·프로그램 확충 및 찾아가는 한국어·사회통합 교육모델 도입

- (야간·주말반 운영 및 찾아가는 수업프로그램 제공) 단기적으로는 시군 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지역 대학 한국어교육원 등을 거점으로 야간·주말반과 이동형 교육(찾아가는 수업)을 운영하여, 교대근무·장시간 노동자와 동반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학습관 연계 상시 온오프라인 교육 개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외국인 교육 여력이 부족한 시군 평생학습관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동반가족 대상 기본 한국어 과정을 상시 개설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온라인·혼합형(온오프라인 병행) 과정 확대 및 수준별 월반제 도입을 통해 농촌·산단 등 원거리 거주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편의성 제고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화 사회통합 교육과정 신설

- (전북형 지역사회통합과정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과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전북형 지역사회통합과정(전북 역사·문화·생활정보, 지역산업·노동법, 자녀 교육, 주거·의료 정보 등 포함)’을 개설하고, 이수 실적을 전북도의 정착지원 및 주거·교육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요소로 활용
- (전북형 지역사회통합과정 이수 인센티브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전북형 지역사회통합과정’ 이수 실적을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F-2-R) 소지자의 영주(F-5) 전환 심사에서 가점 및 심사 간소화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건의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동시에 정주 의지도 강화

■ 교육프로그램 이수 관련 외국인 재정 지원·기업 인센티브 지원

- (교통비·수강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업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이 한국어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참여 시 교통비 또는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성을 검증
- (참여 기업 소규모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근로자의 교육 참여를 지원할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 컨설팅·정책사업 우선 참여 기회·외국인친화기업 인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소규모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나. 생활·정보 지원의 원스톱화 및 통역·상담 강화

1) 문제 인식

- 전북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국제협력진흥원, 공공(지역)·대학 일자리센터, 대학(국제처·취업처), 가족센터 등으로 외국인 관리·지원 관련 기능이 나뉘어 있어 출입국·비자, 취업·창업, 정착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연계해 안내하는 창구가 부재함
- 지역특화형 비자(F-2-R) 자체가 특별히 복잡하게 설계되었다기보다는 ‘유학(D-2)→구직(D-10)→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으로 체류자격과 신분이 바뀌는 전환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모호해지고, 그사이 정착·정주, 취업·진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관리 창구가 부재하여 지원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됨
  - 예를 들어, 유학생(D-2)에서 구직자(D-10)로 전환 후 대학의 공식 지원 기능 및 근거가 약화됨

- 특히 전북에서 유학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우수인재(F-2-R)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지자체·취업 지원 기관 간에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하여 장기 체류·정주를 고려하는 청년 외국인의 이동성과 경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2) 운영 방식 개선

### ■ 전북형 외국인 정보·상담·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 (도 단위 플랫폼 구축) 도 단위에서 (가칭) 「전북 외국인 정주·일자리 지원 포털」을 구축
- (플랫폼 일반 기능 1) 비자·체류자격, 한국어·사회통합 교육, 취업·창업, 주거, 교육·의료, 생활·법률, 동반가족 정착지원 등 생활 전반의 정보를 다국어로 통합 제공
- (플랫폼 일반 기능 2) 시군별 지원사업(정착금 지원, 기숙사 임대료 지원, 노동자 기숙사 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취업상담회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사업 지도·검색 기능을 제공
- (플랫폼 일반 기능 3)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전화·메신저·화상 상담을 운영하고, 필요시 오프라인 기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가족센터 등)에 연계·동행 지원을 제공
- (플랫폼 핵심 기능) 지역 기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배우자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핵심 역할로 설정
- (플랫폼 작동 방식) 전북 도내 기업이 업종·직무·근로 조건·숙소 제공 여부 등 구인 수요를 등록하면,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 및 예비 전환자(유학생·구직자 등)의 학력·전공·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경력·희망 일자리·거주 선호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수동 매칭 및 알림 제공
  - 플랫폼 구축 및 안정화 이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의 배우자로 대상 확대를 추진
- 특히 인구감소지역·산단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매칭·상담 지원 기능을 두어 인력난 해소와 정주 유도를 연계

### ■ 원광대 「전북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과의 연계

- 전북도는 2026~2028년 추진 예정인 원광대학교의 「전북 유학생 통합 지원체계 구축」(총사업비 27억 원,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F-2-R) 정착·정주지원 정책과 중복 없이 상호 보완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 역할 분담

- 원광대 사업과 전북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체류자격과 신분이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지원 기관이 부재하는 한계를 극복
- (원광대 유학 단계 중심) 원광대 사업은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D-2)을 중심으로, 유차-학업-생활-졸업 후 진로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전북도 졸업 이후 단계 중심) 전북도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북형 외국인 정보·상담·일자리 매칭 플랫폼과 이민·정주지원 허브(가칭 전북 이민·정주지원센터)를 통해 유학생이 구직(D-10),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으로 전환하는 이후 단계까지 포괄하는 광역 통합체계를 담당

#### 나. 데이터·플랫폼 연계 방안

- (데이터 공유) 원광대가 구축하는 유학생 통합관리시스템과 도 단위 통합 플랫폼 간에 연계 API 또는 정기 데이터 연동 체계를 마련하여, 유학 단계에서 축적된 국적·전공·한국어 능력·진로 희망 정보를 구직(D-10)·지역특화형 비자(F-2-R)로의 전환 후 일자리 매칭·정주지원·사회통합프로그램 설계에 활용
- (유학생-졸업생 전환 모듈 설계) 도 플랫폼 내에 ‘유학생-졸업생 전환(Transition) 모듈’을 두어, 졸업 예정 유학생에게 구직(D-10)·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 정보, 지역 기업 취업 정보, 정착지원제도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원광대 시스템과 연동하여 알림·상담 신청을 연계

#### 다. 거버넌스 연계

- (협약체 구축 및 활성화) 전북도, 원광대(주관), 도내 대학, 경제통상진흥원·국제협력진흥원, 일자리센터, 가족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북 유학생·이민정책 협약체(가칭)」를 구성하여, 유학생 정책(26~28년 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정주지원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지 않도록 연 1~2회 정례 협의 개최
- (단일 성과지표 설계·점검)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사업의 성과지표(KPI)와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정주·취업 지표를 공동으로 설계·점검
- (단계적 확장 전략) 총 2단계로 이루어진 확장 전략을 추진
  - 1단계(2026~28년): 원광대 사업을 중심으로 도내 유학생 통합관리체계 정착, 졸업 전 구직(D-10)·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 전환 연계 모델 시범 운영

- 2단계(2029년 이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등 다른 체류자격 보유자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북형 지역이민·정주 통합모델로 고도화

■ 다국어 통역·동행 지원 강화

- (통역·동행 지원 서비스 확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행정기관 방문, 병원 이용, 자녀 학교 상담 등에서 통역·동행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비자(F-2-R) 대상 지역에 우선 배치
- (언어 도우미 양성·배치) 지역 대학 유학생과 다국어가 가능한 지역주민을 공식 ‘언어 도우미’로 양성·활용하여 통역과 멘토링을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구축

**<경북 사례 : 전담 플랫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 **목적** : 외국인(유학생·근로자 등)을 지역 우수인재로 유지하고, 체류비자·취업·정착·사회통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 **설립 및 운영 배경** : 2024년, 권역 단위의 외국인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 개소.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정규사업화와 함께 “입국-정착-사회통합” 원스톱 지원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 **주요 제공 기능 및 서비스** :
  -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 체류자격 제도 교육 및 비자 상담 지원
  - 구인-구직 매칭 : 지역 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 취업 연계 및 박람회, 고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서류작성 안내 등 고용 전 과정을 지원
  - 상담·생활·사회통합 지원 : 언어, 생활, 사회통합, 가족 지원, 정보 안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가능 포함
- **공간 및 조직 구조** : 구미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내 상담실, 강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자 심사 기관(출입국사무소)과 물리적으로 동일 건물에 입주하여 비자 업무와 행정지원이 연계되도록 설계

자료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 경상북도, 2024,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발표자료

## 다. 주거·동반가족 지원 강화

### 1) 문제 인식

- 전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외국인 사이에서 이주·정착 지역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높은 주거임대료 부담과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가족 단위 정주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힘
-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의 경우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체류하는 경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취업 연계 미흡, 자녀 보육·교육 관련 지원 부족 등 동반가족 지원 관련 정책적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고재훈 외(2024)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93.8%)은 배우자가 출신국에 거주하고, 5.9%만 한국에 거주하는 반면,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외국인은 배우자의 절반 정도(50.0%)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부분(98.9%)이 출신국에 거주하는 반면,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1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 운영 방식 개선

#### ■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다층적 지원

##### 가. 생활권 기반(권역형) 공동 기숙사·생활거점 모델 도입

- (직주 분리 주거모델 설계)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실제 생활권을 고려하여 ‘직주(직장 소재지-거주지) 분리’가 가능한 주거모델을 설계
  - 김제시에 실제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근무는 전주시에서 하는 경우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근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직주 분리의 현실적 조합을 지원하는 주거모델을 설계
- (생활권 기반 공동 기숙사·생활거점 모델 시범 도입) 도 차원에서 김제·전주, 남원·순창 등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를 생활권(권역) 단위로 연계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생활권(권역) 단위 공동 기숙사·생활거점 모델을 시범적으로 조성
- (생활권 기반 공동 기숙사·생활거점 모델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단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기숙사·정주단지를 조성·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인력적 측면에서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와 인근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권역형 기숙사·생활거점 모델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어, 도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인구 분포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김제

시에 권역형 기숙사·생활거점을 조성하고, 김제시에 위치한 사업체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전주시·완주군 등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도 입주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 이때 김제시가 토지·공간을 제공하고, 도·전주시·완주군 등이 리모델링비·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원 분담 방식을 협의하여 개별 시군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

#### 나. 현금성·바우처형 주거 지원

- (주거비 용도의 정착 지원금·바우처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직후 1~2년을 ‘초기 정착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 전입·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정착 지원금·주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주거지원을 강화
- (기사업 확대·재편) 기존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등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를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확대·재편하여 동일 자원 안에서 단계적 시범사업을 추진
- (주거법률·생활정보 교육 병행) 임대차 계약, 보증금 사기 예방, 주택 점검 등과 연계한 주거법률·생활정보 교육을 병행하여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안전한 주거지 확보’가 실현되도록 지원

#### ■ 가족형 주거 모델 도입

- (가족형 기숙사 설립·확충) 대학 기숙사, 산업단지 인근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부부·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가족형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
- (주거 기반 정착·정주 패키지 지원) 가족형 기숙사 입주자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녀 교육지원(학습·진학 상담),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주거+정착·정주+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지원

#### ■ 주거시설 기반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공

- (주거시설 기반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주택·기숙사 단위로 입주자 커뮤니티, 다문화 소모임,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입주자 행사·환경정비·마을축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 (주거지원 연계 사회통합 촉진) 정착 지원금·주거 바우처·가족형 기숙사 입주 등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전북형 지역사회통합과정 참여·이수를 가점 요소로 설정하여 주거 안정화와 사회통합 촉진을 동시에 도모

**<경북 사례 1 : 상주형 멜팅팟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상주형 멜팅팟’ 장관상

**경북 최다 120명 배정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도내 유일 기초단체,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상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상주형 멜팅팟 조성사업)’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에 사업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광역단체 11개, 기초단체 64개 등 총 75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대회에 제출된 75건의 사례 중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3건(광역 3건, 기초 10건)의 발표사례가 선정됐다. 상주시는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데 이어, 경진대회에서 기관 표창으로 행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 적극 추진 △우수 외국인재 커뮤니티센터 및 단기숙소 조성 △외국인 장기정착 지원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활인구 증가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았다.

올해 상주시 지역특화형 비자쿼터는 120명으로 도내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체류자격 전환 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 초청이 허용되며,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탈률이 낮아지고, 관내 기업의 수요와 효율도가 점차 높아져 지난달까지 15개 기업에 63명이 채용됐다.

또한 상주시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및 문화-법률 역량 강화교육과 정착지원금, 고층 상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서 상주시장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선도 모델로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장기 정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외국인도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k@idaegu.com



상주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난 10월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목적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우수 외국인재의 유입에서부터 안정적인 주거 기반 정착지원으로 외국인 생활인구 증가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내용 :**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 적극 추진
- 우수 외국인재 커뮤니티센터 및 단기숙소 조성
- 외국인 장기정착 지원
- 적극행정 서비스(구인·구직 기업 매칭 및 출입국 행정서류 작성 지원 등) 제공

자료 : 대구일보(2024.12.18.)

### <경북 사례 2 : 외국인 주민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경북도, 외국인 주민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 노후주택 단열 · 도배 ·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가구당 최대 250만원 규모 지원 -

- 주거형태 · 소득수준 고려, 가족 동반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우선 지원대상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5.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거 환경개선 필요 외국인  
 ※ 우선순위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주민 → 고려인주민 → 기타등록외국인

□ **지원규모 :** 5가구 내외  
 ※ 총 15가구 규모이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모집 예정

□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정도  
 ※ 평가시 지원필요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단열, 도배, 화장실 등 주택 보수(불임1 신청서 항목 참고)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미시·김천시·경산시·경주시·포항시·북화군·울진군·영양군·청송군·칠곡군·예천군 11개 시·군 소재 등록 외국인(공고일 현재 기준)
- 해당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임대차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주 동의\*를 받은 자

\* 공사 완료 후 최소 2년간 세임자의 임대차 계약 유지

**- 목적 :**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추진 방안 :** 2025년 5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요 사업 대상 :**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가족 동반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주민’

**- 사업 내용 :**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

자료 : 경상북도 보도자료(2025.5.19),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2025.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자녀 보육료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단위 지역 정착의 안정성 제고
  - 일례로, 경상북도는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아동(3~5세) 어린이집 보육료(월28만원) 전액을 지원
  - 충청남도도 2025년 하반기부터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버전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아동(0~5세)에게 월 25~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

라. 이해관계자 제도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1) 문제 인식

-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내·외 외국인 사이에서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사업의 확산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어, 현장 실무자, 지역 주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도·참여도와 외국인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임

2) 운영 방식 개선

■ 외국인 대상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홍보

- (외국인 대상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홍보) 도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관해 SNS·커뮤니티·온라인 설명회·브로슈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도내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D-2) 및 구직자(D-10)를 대상으로는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맞춤형으로 홍보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예를 들어,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기업이 대학에 방문하거나 대학이 기업에 방문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기업에 대한 소개·홍보 및 채용 면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활성화

■ 사업체 대상 비자 제도 홍보·교육·상담 시행

- (현장 실무자 대상 홍보·교육·상담 시행) 인구감소지역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특

화형 비자 제도에 관한 정기적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운용 애로사항을 해소

■ 지역 주민 대상 외국인 수용성 제고 및 지역사회 상호이해 도모

가. 한국어·사회통합 교육과 주민 교육 연계

- (지역민 교육을 통한 외국인 수용성·문화 이해도 제고)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 대상 한국어·사회통합 교육과 더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이민자 권익,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육·강좌를 제공하여 외국인 수용성과 문화 이해도를 제고

나. 지역 주민-외국인 공동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민-외국인 이웃 관계 형성)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아리, 봉사활동, 마을축제 기획단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동네 이웃'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확대
- (지역민 의견 적극 반영) 지자체·의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지역특화형 비자 기반 외국인 정착·정주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 사안을 조정하는 창구로 활용

마. 시군별 정착지원 표준화 및 취약지역 인센티브 제공

1) 문제 인식

- 김제시, 순창군 등 일부 시군은 정착 지원금·한국어교육·기숙사 임차비 지원·취업상담회·정기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 시군은 정착지원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업 자체가 부재하는 등 시군 간 편차가 크게 존재함
- 이로 인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동반가족의 체류가 일부 시군에 편중됨에 따라, 전북자치도 전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인구·경제적 효과가 제약되고 있음

2) 운영 방식 개선

- (전북도-시군 정착지원 표준패키지 마련) 도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표준패키지(한국어교육·취업 상담·주거·동반가족 지원 4대 축)를 설계하고, 모든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최소 수준의 패키지는 제공하도록 도-시군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 (취약지역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표준화) 특히 일자리 밀집 지역과의 거리, 정주 여건, 기존 사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취약 시군(예: 일자리 밀집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먼 내륙 농촌지역)에는 주거지원, 교통비·통학비, 동반가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도 재정 가점 및 추가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인구·경제적 효과 도모
- (실적 관리를 통한 지속성 확보) 시군별 정착지원 실적은 전북형 통합지원 허브에서 KPI(잔류율, 가족동반율, 주거안정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등)로 관리하고, 우수 시군에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 경쟁력과 책임성 및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

## 2. 제도 운용 개선 및 중앙부처 대응 전략

### 가. 전북형 외국인 통합지원 전담 기관(게이트웨이) 지정 및 조직·인력 체계 정비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정착-사후관리를 포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전담 기관·전담부서가 부재하고, 담당 인력 또한 다른 다수의 일자리·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임
- 또한,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관련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외국인과 고용주가 ‘어디에, 무엇을’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가칭) 「전북 이민·정주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외국인·동반가족을 물론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핵심 과제인 만큼 지역 차원의 상설 허브 기관 지정이 필요함
  - 도 직속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공동 운영센터 형태로 설치하고,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일자리센터·외국인지원센터와 역할 분담·연계를 체계화
- 전담 기관으로써 해당 센터는 체류자격 안내, 구인·구직 매칭, 정착·주거 지원 연계, 대학 국제처·일자리센터와의 협력, 사후관리 및 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등 지역특화형 비자 전담 창구를 운영
  - 비자·체류, 고용·노동, 주거, 교육, 사회통합, 치안·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상담·연계·사례 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
  - 외국인·고용주·지역 주민 대상 조사·교육·캠페인 및 정책홍보를 수행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자 유형·체류기간·고용·주거·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정주·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
- 시군 단위에서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거나 전담 조직이 부재한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최소 1인의 지역특화형 비자 전담 창구(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일자리·인구·외국인정책 등 관련 부서 중 하나로 정하여 업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는 이들 전담 창구에 대

한 교육·컨설팅, 정보시스템,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시군 간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나. 제도 운용 지침 개선 및 중앙부처 협의 과제

### 1)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정 범위에 온라인·혼합형 과정, 지자체 자체 과정을 포함하도록 기준 확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외국인이 근무시간 조정, 야간·주말 참여, 온라인 과정 활용 등을 통해 교육에 보다 쉽게 참여·이수할 수 있도록 고용주 협조를 유도하는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마련을 요구해야 함

### 2) 사업장 변경·추가 취업 지침의 유연화와 권익 보호

- 인구감소지역 특성상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특정 업종의 사업장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 사업장 변경 시 동일업종 유지 원칙을 완화하고, 지자체-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합동으로 사례를 검토하는 예외 허용 절차 마련을 건의해야 함
- 추가 취업활동 허용 시 ‘주된 취업’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기준(근무시간·임금 등)을 제시하되, 과도한 행정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3) 인구감소지역 현실을 반영한 비자 요건 탄력적 운용 건의

-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영세·중소 제조업, 식품가공업 분야 사업체는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으나, 비전문취업(E-9) 대상 제외, 출신국 비율 및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등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F-2-R) 요건이 실제 수요와 괴리가 커 인력 확보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취득자 중 베트남 국적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특정 업종에 한해 출신국 비율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시범운영을 법무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전문취업(E-9)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의 기능·대상·지원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건·운영지침의 정비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 능력 요건의 경우, 현재 토픽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의 산업·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직무에 한해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 3단계 수준을 인정하는 등 차등 적용·탄력 운용을 법무부와 협의함으로써 인력 수급과 사회통합 목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4)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와 자원 안정화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를 전제로 전북 사례를 근거로 한 제도 설계·예산 배분 기준을 제안해야 함
- 정주지원·사회통합·주거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지방비 매칭 구조 및 인구감소지역 가점 부여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고용·정주 관련 다른 자원과의 패키지형 자원 설계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함

### 다.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 통합 데이터 구축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지자체·고용보험·교육기관·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전북형 통합지원 허브((가칭)「전북 이민·정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분석해야 함
- 유입-취업-정착-이동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연도별·시군별 성과(취업률, 잔류율, 가족단위 체류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주거안정도 등)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2) 성과지표(KPI) 고도화

-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KPI를 단순 ‘추천 인원·비자 발급 건수’에서 취업 지속기간, 정주기간, 가족동반율, 지역사회 참여도, 주민 수용성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

### 3. 정책적 활용방안 및 후속과제 제언

#### 가. 정책적 활용방안

##### 1) 전북 지역이민·정주 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기반

- 본 장에서 제시한 정주지원, 주거모델, 통합지원 허브,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이민정책 기본계획(가칭)」 및 전북특별법 출입국 특례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 실행과제로 반영될 수 있음

##### 2) 중앙부처 법령·지침 개정 건의의 근거로 활용

-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요건 탄력 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정 범위 확대, 사업장 변경 지침 완화 등은 법무부 및 관계부처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시 전북 사례에 기반을 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나. 시군별 시범사업 및 후속연구 추진

- 권역형 주거·생활거점 모델, 시군 정착지원 표준패키지, 유학생(D-2)-지역우수인재(F-2-R) 전환 연계 등은 김제·정읍·부안 등 선도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평가한 후,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전략이 요구됨
- 유학생(D-2)·구직자(D-10)·지역우수인재(F-2-R)·동반가족(F-3-1R, F-1-R)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제언을 보완·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고재훈, 송영호, 손인서. (2024). 전북 외국인 주민 실태 및 필요인력 수요조사.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2025).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 박민정, 한기덕, 이완, 이화용, 박동찬. (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 법무부. (각 년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 법무부. (2013).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 법무부. (2025). 2024 체류외국인통계
- 서연미, 유희연, 김은란, 민성희, 이효란.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이민정책연구원. (2025). 2025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자료.
- 이주연, 최지훈. (2024).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연구수행기관

---

전북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장성화	
연구책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희진
공동연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원	전아람

---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발행일 | 2025년 12월 24일

인쇄일 | 2025년 12월 24일

발행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행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